

# 냉전 금제와 프로파간다\*

## — 叛亂, 轉向, 附逆 의제의 제도화와 내부냉전

李奉範\*\*

I. 진실 복원에 대한 심문	III. 프로파간다와 疑似합의적 냉전mentality의 정착
II. 내부냉전 구조의 창출과 냉전 금제의 제도화	IV. 전후 심리전의 징후-결론을 대신하여

### • 국문초록

이 글은 반란, 전향, 부역 등 주요 냉전의제의 기원 및 제도화 과정과 그것이 장기 지속될 수 있었던 원천을 프로파간다에서 찾고 있다. 미소 분할점령 하 한반도는 세계 냉전체제가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이전부터 냉전의 소용돌이에 갇힌다. 특히 모스크바 삼상회의협정을 계기로 국내 모든 세력이 반탁/지지로 분립되어 형성된 왜곡된 프레임의 극단적 전개는 때 이른 냉전질서가 부식되는 구조적 조건으로 작용했다. 1947년 9월 한국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면서 한반도의 대내외적 냉전화가 촉진되는데, 그것은 냉전이 한반도에서 명시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선단정 국면을 거치며 민족국가 수립 관련 의제들의 압축적 분출과 이데올로기적 대결을 거쳐 분단의 제도화로 귀결된 뒤 국가보안법 제정을 계기로 반란, 전향, 부역 의제가 한층 강화된 냉전적 진영대립과 결합하여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의미 변용과 계기적 연쇄를 통해 한국사회에 전일적 냉전구조가 고착되기에 이른다. 여순사건은 극우반공체제가 촉진·구축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공식적으로 토벌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리산공비토벌, 제2, 제3의 여순사건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 S1A5A2A03031971).

\*\*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초빙교수

등의 명명을 통해 재생되어 내부평정작업을 뒷받침하는 이념적 도구로 이용되면서 반란의 대명사로 고착, 각인되었다. 그 과정에서 문학, 영화, 사진의 특정 이미지 재현과 관민협동의 프로파간다를 통해 반란으로서의 여순사건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학살의 정당화, 공산주의에 대한 막연한 공포, 적대, 증오가 조장되었다. 국민보도연맹 창설로 본격화된 전향은 국가보안법의 뒷받침 속에 대량탈당을 통해 사회주의자는 물론이고 중도파, 자유주의자, 민족주의자까지 망라된 방대한 전향으로 현시된다. 국민보도연맹은 전향자의 포섭, 교화 단체였을 뿐만 아니라 좌익섬멸단체로서 남·북로당 분쇄를 비롯해 반정부세력 일체를 파괴하는 공작을 시행하였고, 전향-감시-동원의 권력테크니컬을 구사했다. 인간의 사상을 개조한다는 어찌면 불가능에 가까운 논리로 전향제도가 시행되었기에 이 시스템은 더욱 폭력적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었다. 문화영역의 전향은 색출, 포섭, 전향, 동원, 감시의 전향메커니즘이 잘 구현된 경우로 문화적 내부냉전구조와 상시적인 동원·감시체계를 정착시키고 반제반봉건 문화의제가 완전히 좌절되는 가운데 친일문화인의 제도적 복권이 이루어지게 된다. 반민특위 해체와 한국전쟁, 법적으로는 반민법과 부역법의 교차로 인해 이데올로기적 가치가 민족 가치를 압도한 가운데 附共 부역이 반역의 단일한 표상으로 대두한다. 친일파가 빨갱이를 단죄하는 아이러니컬한 형국이 조성된 것이다. 잔류했거나 부역혐의가 의심되거나 부역자로 입증된 문화인들은 합동수사본부와 자체 부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더라도 자신의 부역 체험을 고백, 참회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고, 그로 인해 각종 체험수기가 속출했다. 당시의 모든 체험기는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고 대공전선 강화를 위한 선전전 자료로 활용되면서 공포와 적의를 고취시켜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담론 효과를 발휘했다. 일부는 자유세계로 전파, 확산되어 냉전 심리전의 자료로 활용되었다. 문화계는 부일 부역과 부공 부역을 결합시킨 민족반역프레임이 가동되었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좌익, 전향, 부역, 월북(남) 등의 냉전금제들이 종합적으로 재구성된 민족반역프레임이 주조, 구축되면서 국가폭력을 능가하는 규율장치로 군림하는 가운데 냉전분단체제의 문화 권력을 (재)생산하는 장기지속적 장치로 기능했다. 이 같은 냉전금제들은 프로파간다를 통해 침투, 부식되었다. 대내외적 냉전구조의 정착과 대응해 한반도는 선전전(Propaganda War)의 전장으로 비화되었고, 미국의 전략심리전과 한국정부의 대북 선전전 및 대내 선무심리전이 결합적으로 전개되었다. 냉전반공을 공동의 자원으로 마음의 점령을 목표로 한 관민협동의 선전전을 통해 생성한 이미지가 반복 재생되어 고정화되고 그것이 법, 제도, 담론, 일상, 신체, 정신의 영역 전반에 이데올로기로 기능하는 회로가 구축됨으로써 疑似합의적 냉전mentality가 용이하게 부식될 수 있었다.

**주제어 :** 냉전, 프로파간다, 반란, 전향, 부역, 내부냉전, 국가보안법, 국민보도연맹, 동원, 항쟁, 학살, 재현, 여순사건, 반역프레임, 선전전, 심리전, 냉전mentality

## I. 진실 복원에 대한 심문

박완서의 단편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창작과비평』 제17권 2호, 1989 여름)는 6월 민주항쟁으로 창출된 열린 시공간에서 전시부역자의 생애에 대한 정직한 복원의 당위성과 그것의 난망함을 예리하게 그리고 아프게 심문하고 있다. 소설가로 전시에 문학가 동맹에 가입한 부역 혐의로 인해 감옥에서 사형을 당한 송사묵, 그 객관적 사실이 왜곡되어 (남)월북 작가의 일원으로 버젓이 (남)월북문인선집에 등재되어 있는 현실, 이 간극에서 박완서는 비국민으로 배척되었던 한 인간의 삶을 사실 그대로 복원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어디 송사묵 뿐이겠는가, 또 부역 문제만이겠는가. 실로 여기에는 냉전분단체제의 기원 및 장기 지속의 원천인 국가폭력과 이로부터 초래된 대다수 (비)국민들의 강제된 질곡의 시간이 무겁게 가로놓여 있다. 부역 문제만 보더라도, 해방 후 침예하게 부각되었던 부일 부역문제는 점차 소거된 채 附共 부역이 민족반역자의 단일한 표상으로 대체되고, 이 전치된 냉전프레임의 강압적 작동을 통해서 일상화된 국가의 국민심판이 야기한 공포로 말미암아 “짐승처럼 살아남았던”(166면) 수많은 ‘관제공산주의자’의 고통을 어찌 계량할 수 있겠는가.<sup>1)</sup> 또 짐승처럼 죽어간 사람들은 물론이고 짐승처럼 살아남기 위해 밀고, 은폐, 조작, 침묵, 방관, 망각으로 점철된 오욕의 세월과 여기에 덧붙여 가해진 사회적 폭력과 배제의 공모가 누적된 역사의 구각을 뚫고 사실을 복원하는 일은 녹록지 않다. 법과 제도의 영역을 상회하는 문제이기에 더욱 그렇다.

국가권력은 수차례 부역자들에 대해 선처했다고 공언해왔다. 전시에는 부역자들을 대거 석방했고, 부역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로 야기된 공포와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해 전시 부역뿐만 아니라 해방 후 경미한 일체의 부역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자에게는 불문에 그치는 것과 함께 국민으로 포용하고자 했으며(1955.11),<sup>2)</sup> 친족의 부역행위

1) 안우환, 「나는 官製共產主義者」, 『동아일보』, 1964.5.27.

2) 검찰청이 1955년 11월부터 시행한 ‘부역자처리에 대한 신방안’을 말한다. 자수를 전제로 경미한 부역자 나아가 해방 후 좌익사건관련자들의 전력을 불문에 붙이고 포섭·보호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실체는 1954년부터 공세적으로 추진된 사상총동원체제 프로젝트 차원에서 내부의 적을 색출해 감시·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았고, 당시에 국민보도연맹의 재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악질 부역행위는 국가보안법의 추급 대상이 되었고, 자진 신고자도 진정성을 의심받았다. 주목할 것은 부역자가 간첩과 동등하게 취급되었다는 사실이다. 간첩자수기간을 수시

로 공사 생활의 불편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연좌제 폐지(1980.8, 제5공화국헌법 제12 제3항)와 더불어 5천여 명의 생존부역자 신원관리기록을 삭제하는(1984.10) 등 관대한 처분을 시행했다고 하였다. 사실이다. 그러나 일련의 행정조치를 관통하는 기조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또 진상 조사를 방기한 가운데 사회통합 및 국민화합을 위한 은전이라는 것이었다. 실상 각 조치들은 애초 천명한 철폐, 불문의 방침을 국가가 스스로 어겼다는 사실을 자인한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기만적인 술책에 불과했다. 2010년에 가서야 ‘비상상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폐지와 동법에 기인한 형사사건 임시조치법’이 폐지된 사실이 이를 증명해준다. 연좌제 폐지, 관리기록삭제 조치로 부역(자)의 사실과 낙인이 자동 소멸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조치들로 인해 부역자=반역자라는 표시가 강화되는 동시에 공포를 환기, 재생산하여 사회적 내부 적대를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생존부역자들은 부역의 전과기록이 삭제되었다 하나 ‘반역의 길’을 걸었던 존재라는<sup>3)</sup> 사회적 표시, 낙인은 여전히 남아 당사자와 유가족을 옥죄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런 상황에서 소설의 화자가 진상을 복원하려는 시도에 이력저러한 이유로 비협조적이었던 인물들의 생존 욕구나 (남)월북 작가작품 해금조치에 편승해 송사목을 월북작가로 기정사실화하는 유가족들의 자구적 목계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 그래서 복원불가능성의 시사가 더 묵직하게 감수되는지 모른다.

복원의 의미가 단순히 오류를 바로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있다고 할 때,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복원이 불가능했던 것들이 복원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민중의 힘이 개척한 자유화, 민주화 국면에서 그동안 철저하게 은폐, 망각되었던 냉전금제들이 공개적이고 전면적으로 폭로되면서 역사적

---

로 설정해 남파간첩, 조총련 및 적성국가를 우회·침투한 간첩, 6·25부역자로서 죄상을 은폐한 자를 동일 범주화하여 간첩으로 취급하고 자수와 아울러 체포를 강화함으로써 휴전-1957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한 7,319명 가운데 부역자가 3,389명에 달했다(『경향신문』, 1958.5.18.). 4·19직후 ‘비상상태하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폐지와 동법에 기인한 형사사건임시조치법’이 마련돼 재심 청구가 가능해졌는데, 당시 일반법원에서 유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부역자의 규모는 총 13,703명으로(군사법원 제외), 가석방자 191명, 특사 3,393명, 형집행정지 및 사망자 368명, 형집행완료자 9,391명, 현재 형집행 중인 자 360명 등이었다(『동아일보』, 1960.11.3.). 검찰의 신방안과 그 후속조치가 부역자처리의 일대 전환이라고 대서특필되었으나, 이 조치는 결국 부역자를 간첩과 동등한 내부의 적으로 규정한 가운데 내부평정의 수단, 또 대북프로파간다의 일환으로 활용했을 뿐이다.

3) 「부역기록 삭제와 특사와」(사설), 『동아일보』, 1984.10.3.

진실에 대한 복원의 가능성을 열었다. 특히 기억하고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불온시되던 민족(국가) 반역의 의제들이 의사합의적 형태로 공고하게 재생산되어온 냉전이 데올로기의 균열, 와해와 맞물려 비로소 세상 밖으로 공표될 수 있었던 것은 극적이다. (남)월북문제는 문인예술가의 해금조치가 단행되면서 복원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비록 민간인월북자들의 처리가 배제되었고, 또 사상적·정치적 복권이 불허된 한계를 지닌 것이었으나 냉전의 벽을 국가권력이 자발적으로 허무는 시발점으로서의 의의가 컸다. 전쟁부역자의 실체도 처음으로 공개되었다.<sup>4)</sup> 전쟁부역자의 규모, 도강과와 잔류과의 갈등, 부역자처벌 과정 등 전쟁부역의 전모가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다. 또한 풍문으로 떠돌던 보도연맹사건이 연속 보도되면서<sup>5)</sup> 국민보도연맹의 실체와 국가권력이 자행한 민간인학살의 문제가 쟁점화 되기에 이른다. 이를 통해서 당시에 현존하고 있던 사상전향제도의 문제, 비전향장기수의 존재가 주목될 수 있었다. 반역의 대명사로 각인된 빨치산에 대한 조명도 좀 더 전향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문학의 성취가 돋보이는데, 여순사건을 반제 민족해방투쟁으로(『태백산맥』 수정판, 1989), 6·25 전후의 빨치산 활동을 민족해방과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으로(『빨치산의 딸』, 1990) 형상화함으로써 빨치산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발시켰다. 6·29선언 직전 제주 4·3항쟁을 민족주의적 저항의 시각으로 형상화한 이산하의 장편연작시 「한라산」(『녹두서평·1』, 1986.3)에서 본격화된 반역 금기에 대한 문학적 도전이 공적 기억(록)에 대한 대항을 넘어 대안적 시각의 창출을 수반하며 복원의 지평을 확장시켜나갔던 것이다.<sup>6)</sup>

이 같은 공론화를 계기로 분단 반세기를 지탱해왔던 금제와 억압의 기제들에 대한 역사화작업이 촉진되었고, 그것이 실질적 민주주의의 쟁취라는 시대적 과제와 결합하면서 냉전금제의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철폐하기 위한 도전이 거세게 일었다.

- 
- 4) 박원순, 「전쟁부역자 5만여 명 어떻게 처리되었나」, 『역사비평』 11, 역사비평사, 1990, 172~198면.  
 5) 김태광, 「해방 후 최대 양민참극 ‘보도연맹’ 사건」, 『말』, 1988.12; 「‘보도연맹’ 사건」, 『말』, 1989.2.  
 6) 유화국면 직후 냉전반공프레임을 둘러싼 사상전의 프로파간다가 극렬하게 전개된 국면에서 창작된 이 작품은 곧바로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필화사건을 겪는데(1987.11),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사회로 파악하고, 무장폭동을 민족해방을 위한 도민항쟁으로 미화하며, 인공기를 찬양하는 등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작가가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작품은 김진균 교수의 평가처럼 현대사의 핵심 부분을 천착하여 학계의 관련 연구를 촉발시키면서 분단이데올로기를 극복하는 일 계기로 작용했다. 「한라산」 필화사건에 대해서는 김지하 외, 『한국문학필화작품집』, 황토, 1989, 119~142면 참조.

분단시대 국민의 신체와 정신을 점령했던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운동과 사상 전향제도를 법적으로 정당화한 사회안전법 폐지운동이 광범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국민적 도전은 좌절 혹은 부분적 성취로 귀결되었으나, 그 결과보다도 사회 및 국민통합이란 미명 하에 국민/비국민을 경계 짓고 비국민을 색출, 처벌, 감시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사회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 특히 사회안전법 폐지를 둘러싼 국가와의 대결은 인간내면의 생각을 법과 제도로 강제했던 전향제도의 뿌리 깊은 반문명성, 반인권성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의를 지닌다. 전향제도가 1930년대 일제강점기나 정부수립 후 공산주의(사회주의)자들을 격리시키기 위해 고안해내었던 사문화된 제도가 아니라 다기한 변용을 거쳐, 특히 1973년부터 반국가사범을 전향시키기 위해 교도소에 전향공작 전담반이 설치·운영되었고, 긴급조치9호와 함께 사회안전법을 제정해(1975.7.16) 보안처분대상자들에게(형법상의 내란죄, 외환죄, 균형법상의 반란죄, 이적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 보안처분의 면제조건으로 전향서 작성을 강요해왔다는 사실은 진상복원의 시각과 방향을 암시해주는 것이었다. 사회안전법이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1936.12), ‘조선사상범예비구금령’(1941.2)에 근거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청산하지 못한 식민유산에 대한 관심을 자극하기도 했다. 사회안전법이 폐지되고(1989.3) 그 대안으로 ‘각서’나 ‘생활계획서’로 변용해 비전향장기수를 대상으로 한 전향의 요구가 여전히 강제되는 상황을 거쳐 마침내 전향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시키거나(1998.7) 또 다른 대안으로 ‘준법서약서’를 도입하는 지난한 도정이 이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조시켰다.

냉전금제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2000년대 들어서 때늦게 활성화된다. 제주 4·3민중항쟁의 복원과 같은 국가차원의 공식적 진상규명 작업의 개시와 병행하여 망실된 자료의 발굴, 조사에 입각한 연구가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었다. 국가폭력의 피해자 및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구술조사방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대항 자료에 입각한 진상규명과 연구의 질적 수준이 제고될 수 있었다. 구술사를 통해 획득된 일반 민중들의 경험과 기억은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복원하는 사료로, 이는 공적문서나 기록에 의존한 정형화된 역사서술을 교란, 전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7) 연구의 대체적인 경향은 반란, 전향, 부역 등의 중요 냉전금기들의 형성, 제도화,

7) 본고의 관심사와 관련된 예로 한국구술사학회 편, 『구술사로 읽는 한국전쟁』, 휴머니스트, 2011의

작동 양상을 재구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관련된 특정 사건의 전모를 밝히거나 국가폭력의 시원(1948~1953년)을 구명하는데 다소 집중된 면이 없지 않다. 본고는 반란, 전향, 부역의 냉전의제에 대한 접근이 각기 고립 분산적으로 수행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세 가지 의제를 냉전금제로 묶어 고찰해보고 냉전금제의 기원뿐만 아니라 그것이 장기 지속될 수 있었던 제도적 원천을 프로파간다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필자는 박완서가 심문했던 복원의 진정성은 다소 추상적일 수 있겠으나, 1980년대 말 “전향의 문제는 종이 한 장의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는 절규에 함축되어 있는, 역사에 기입될 수 없었던 못 인간들의 존재를 마주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1949년 9월 30일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이적행위 및 간첩행위 혐의로(국방경비법 제32조) 사형을 선고받은 俞鎭五가 최후진술에서 언명한 “양심적인 문화인으로 살고 싶다”는 불굴의 신념과 여순사건 진압군 장교의 증언의 대비가 함의하고 있는 역사성을 주목하는 데서 시작한다.<sup>8)</sup>

## II. 내부냉전 구조의 창출과 냉전 금제의 제도화

미/소 분할점령 하 한반도는 세계 냉전체제가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이전부터 냉전

---

성과가 주목되는데, 이 구술사에 수록된 빨치산, 의용군, 전쟁미망인, 월북가족, 전쟁포로, 빨갱이로 낙인찍힌 이들의 전쟁 경험과 기억은 기존 한국전쟁에 관한 기록과 연구가 포착하지 못한(포착할 수 없었던) 한국전쟁으로 초래된 민중의 일상적 역사를 촘촘하게 복원해주고 있다. 이 같은 구술 자료는 1980년대까지 성행했던 체험 및 증언을 강조한 저널리즘의 다양한 史記기획, 가령 『조선일보』의 ‘전환기의 내막’ 시리즈(1981.1.5.~12.29, 244회, 이 중 30개를 선별해 엮은 『전환기의 내막』, 조선일보사, 1982.2)가 시도한 저명인사 위주의 체험, 증언, 평가가 대체로 기존의 공적 기록(기억)을 추인하는데 기여했던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 8) 남로당 지리산문화공작대장이었던 유진오가 동 공작대원 홍순학(영화동맹원), 유호진(음악가동맹원)과 남로당 문화부장 겸 특수정보부책임자 김태준, 동 공작대원 이용환, 박우용, 이원장, 지리산빨치산 부사령 조경순(김지희 처) 등 9명과 함께 받은 재판의 심문과정, 최후진술의 골자는, ‘내가 원하는 것은 38선이 없는 완전 통일된 정부의 수립이며, 그것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쟁취한 인민공화국이다(심문과정에서의 진술), “나는 전 민족의 염원인 자주독립 국가를 열망했다. 양심적인 문화인으로 살고 싶다”(최후진술)로 요약할 수 있다(『경향신문』, 1949.10.2). 여순사건 때 진압군 장교였던 김철덕 대위가 군검찰측 증인으로 나와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잔악한 행동을 한 여순반란 폭도들의 피비린내 나는 행동을 설명했다.

의 소용돌이에 갇힌다. 그것이 외생적으로 부과된 것이자 동시에 민족국가 건설의 서로 다른 이념과 노선에 입각한 내부의 정치적 대립이 착종됨으로써 더욱 극심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모스크바삼상회의협정(신탁통치안)을 계기로 국내 모든 (정치) 세력이 반탁/지지로 분립되는 가운데 형성된 왜곡된 프레임, 즉 반탁운동=민족주의=애국/찬탁운동=친소반민족주의=매국의 극단적 전개는 때 이른 냉전질서가 부식되는 구조적 조건으로 작용했다. 오해와 왜곡으로 조성된 이 좌/우 프레임은 즉자적 정파성의 이데올로기적 각축으로 현시되면서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의 진보적 의제들을 심각하게 변질시켰다. 또한 당면한 민족문제 해결의 기축이 (반)민족에서 (좌우)이데올로기로 급속하게 전치되는 것과 맞물려 정치, 사회, 문화적 세력관계의 재편이 추동되는 한편 남한사회 각 부문에 내부냉전을 일찌감치 구조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반도의 대내외적 냉전화는 한국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어 남한정부가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되는 1년여의 시간 동안 한층 강화된다. 두 차례 미소공동위원회의 파행과 그 최종적인 결렬 뒤 1947년 9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독립)문제를 총회에 제의하면서 한국문제는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기에 이른다.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은 미/소협상의 최종안이었던 신탁통치(안)의 파기이자 동시에 미/소간 재조정된 한반도정책의 불가피한 대립을 예비한 것으로, 이는 냉전이 한반도에서 명시화되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sup>9)</sup> 유엔을 무대로 한 미/소의 대결은 미국의 유엔감시하의 총선거案과 소련의 양군동시철퇴案의 대립구도 속에서 미국案의 채택에 따라 남북한 총선거를 관리, 감시하기 위해 파견된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COTK)의 존재와 그 활동을 둘러싼 갈등으로 격화된다.<sup>10)</sup> 미국 주도의 유엔 운영에 대한 불만으로 야기된

9) 이완범, 「미군정과 민족주의, 1945~1948」, 한국현대사연구회 엮음, 『한국현대사와 민족주의』, 집문당, 1996, 96면.

10) 한국문제에 관한 유엔의 결의(안)들은 대체로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COTK)의 활동보고(서)를 토대로 이루어지는데, 미소의 알력과 그에 따른 위원단구성 국가들의 분열, 소련(북한)의 비협조, 남한 정치세력 간 갈등 등으로 운신이 폭이 크게 제한되었으나 남북총선거의 관리뿐만 아니라 정부수립 후에도(1948.12 유엔한국위원단(UNCOTK)으로 개칭) 양군철수 감시, 남북한의 대치 상황, 남한의 치안상태, 38선 군사적 충돌 등의 동향을 조사 보고했으며 한국전쟁 발발 후에는 한국전쟁의 경과에 관한 보고서(111항) 제출, 유엔한국통일위원회(UNCURK)으로 개칭한 후에는 전시, 전후 한국의 재건사업에 관한 해결책 제시 등 유엔의 한국재건원조사사업의 중요한 창구 역할을 수행한 뒤 1973년 12월 해체되었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구체적인 활동상 및 한국관계 유엔결의문에

임시위원단 구성의 갈등을 내포한 채 1948년 1월 내한한 임시위원단의 임무 수행은 소련이 이북의 입경을 거부함으로써 시작단계부터 난관에 부딪혔고, 이후 임시위원단을 통한 총선거 실시의 구체적 방침을 둘러싼 다층적 대립, 즉 임시위원단 내부의 대립, 이남과 이북의 대립, 남북협상을 두고 미군정과 임시위원단의 대립, 임시위원단과 남한 정치세력간의 협조/갈등 및 정치세력간의 대립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분출되는 가운데 결국 남한만의 단독선거로 귀결된 일련의 절차는 단독정부수립이라는 미국의 수정된 한반도정책이 지배적으로 관철되는 과정이었다.<sup>11)</sup> 선거(결과) 범위의 전국적 지위 여부에 대한 해석의 논쟁을 불식시키며 한국이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국제적으로 승인한(1948.12.12.) 것도 미국이 단독정부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엔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였다.

그것은 미국외교정책의 원칙으로 설정된 트루먼독트린(1947.3), 즉 전후 세계질서를 전체주의/자유주의의 분할·대결로 규정하고 전체주의에 맞서 자유주의국가의 방위를 지원해야 한다는 기조가 본격적으로 시현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유엔의 한국문제 결의과정에서 제안된 한국문제는 한국인들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유엔 정신의 훼손이자 자주적 통일 민족국가 수립을 열망했던 대다수 한민족(중)의 충의를 배반한 것이다. 어쩌면 주어진 타율적 해방의 흑독한 대가였는지도 모른다. 이 같이 유엔과 한국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탄생한 단독정부의 수립과 그로 인한 분단의 제도화는 세계적 냉전체제 성립의 촉성과 한반도의 냉전화가 상호 상승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후 한반도는 더욱 확대·강화된 대외내적 냉전 대결의 전장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었다. 남북한의 헌법에 각각 명문화된 영토 규정의 불일치, 즉 남북이 상호 자기 영토를 僭竊한 적으로 상대를 명시해 놓은 것은 무력충돌까지를 포함해 화해 불가능한 극한 대립을 예비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

대해서는 정일형, 『유엔의 성립과 업적』, 국제연합한국협회, 1952.3, 474~562면 참조. UNCURK가 해체되는 과정에는 1970년대 초 미중 대탕트 국면에서 중국이 해체를 강조한 것이 크게 작용했는데, 이는 UNCURK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유엔의 관여를 상징하는 기구였기 때문에 이를 해체함으로써 한반도 분단문제를 더 확실하게 국제적 문제에서 남북한 사이의 문제로 전환시키려 했던 미중의 이해관계가 부합한 산물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홍석률, 『분단의 히스테리』, 창비, 2012, 185~186면 참조.

11)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둘러싼 다층적 대립 양상에 대해서는 양준석, 「1948년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활동과 5·10총선에 대한 미국정부와 한국인들의 인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40-1,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8, 81~112면 참조.

유엔을 매개로 한국문제 해결의 열쇠가 국제화된 상황과 맞물려 남한사회는 극단적인 내전상태에 돌입한다. 이른바 ‘단선단정 국면’이 전개되는데, 단독선거 및 단독 정부수립안, 남북협상, 미소양군철폐 등의 의제를 둘러싼 종횡의 적대가 노골화되면서 자주적 민족국가수립을 위한 최후적 대결국면이 조성된다. 이를 계기로 신탁통치 반대/지지의 대결구도가 단독정부 추진/자주적 단일정부 수립의 대립 전선으로 세력 관계가 재편성되는 가운데 구국운동의 냉전적 적대가 전사회적으로 파급되기에 이른다. 남로당을 위시한 (극)좌파 진영은 미소양군의 즉시 철수와 단선반대를 내걸고 전국적인 총파업, 이른바 ‘2·7구국투쟁’에 돌입하면서 단선지지의 극우파뿐만 아니라 중도파로까지 투쟁범위를 확대시켜 파괴, 습격, 테러, 선전선동을 강화하고 지하공작과 함께 야산대를 조직, 무장유격전을 개시했다. 단독선거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분열한 이승만과 김구는 유엔소총회의 단독선거안이 확정되자(1948.2.26) 이에 편승·영합하려는 세력(이승만-한민당계열)과 남북협상으로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세력으로(김구-김규식계열) 분화, 대립한다. 좌우합작운동의 실패로 입지가 축소된 중도파 민족주의자들은 유엔(임시위원단)에 대한 애초의 기대와 희망적 관측을 포기하고 단선단정반대를 구심점으로 집결하여 저지 투쟁에 매진한다. 특히 문화지식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중도파들의 프로파간다와 집단적 결사는 단정이 수립된 이후로까지 지속되었다.<sup>12)</sup> 단선단정의 국면이 결국 단정 수립과 분단의 제도화로 귀결되었으나 이 신국면은 ‘한 원칙 한 진리, 즉 남북통일(민족통일) 앞에 두 방법, 두 힘의 충돌’<sup>13)</sup>에 따른 테러, 파업, 소요, 선전, 무력시위 등의 난무를 수반한 적대적 대립이 비등하면서 내부냉전이 사회 전 부문에 만연되기에 이른다. 단선단정 반대, 남북협상지지, 양군철폐 주장은 공산당(소련, 북한)에 동조하는 반역으로, 그 반대 입장 또한 민족반역으로 상호 규정되며 구국(애국/매국) 프레임을 전폭적, 일상적으로 작동하게 된다.<sup>14)</sup> 이 같은 맥락에서 빨갱이가 탄생한 가운데 자의적인 의미 변용

12) 당시 단선단정반대, 양군철폐를 내용으로 한 자주적 통일민족국가 건설을 주창한 중도파민족주의자들의 성명(선언)에 대해서는 이봉범, 「상상의 자주적 통일 민족국가: 북조선, 1948년 체제」, 『한국문학연구』 47,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14, 261~313면 참조.

13) 홍종인, 「남북회담과 총선거」, 『민성』, 1948.5, 7면.

14) 문화영역으로 보면 (극)좌파는 물론이고 선언(명)서 운동으로 분출된 중도파민족주의자들의 단선단정반대, 자주적 통일국가수립을 위한 이념과 노선은 남로당직계들의 총선거방해 및 단독정부거부를 위한 공작이자 공산당노선에 동조하는 반역자로 규정된다(김동리, 「문화인에게 보내는

을 통해 사회전반에 증오, 적대의 냉전적 내부질서가 조장되었다.

불원한 장래에 사어사전(死語辭典)이 편찬이 된다고 하면 빨갱이라는 말이 당연히 거기에 오를 것이요, 그 주석엔 가로되 “1940년대의 남부조선에서 볼셰비키, 멘셰비키는 물론 아나키스트, 사회민주당, 자유주의자, 일부의 크리스찬, 일부의 불교도, 일부의 공맹교인(孔孟敎人), 일부의 천도교인, 그리고 주장 중등학교 이상의 학생들으로써 사회적 환경으로나 나이로나 아직 확고한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잡힌 것이 아니요, 단지 추잡한 것과 부정사악(不正邪惡)한 것과 불의한 것을 싫어하고, 아름다운 것과 바르고 참된 것과 정의를 동경 추구하는 청소년들, 그 밖에도 xxx과 xxx당의 정치노선을 따르지 않는 모든 양심적이요 애국적인 사람들, (그리고 차경석의 보천교나 전용해의 백백교도 혹은 거기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 빨갱이라고 불렀느니라.”하였을 것이었다.<sup>15)</sup>

집필 시점(1948.6)을 고려할 때, 단선단정국면에서 빨갱이의 탄생 메커니즘과 그것의 무분별한 사회적 작동 양상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허구이되, 현실을 압도하는 핏진함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소설에서 그려지고 있듯이 빨갱이는 좌익세력뿐만 아니라 친일-단선단정세력 외의 모든 이념, 세력, 지향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심지어 부자지간에도 그것이 적대적 증오로 작동하는 가운데 빨갱이는 매국반역자로 규정되면서 민족의 이름으로 철저한 소탕, 절멸의 대상으로 취급되었다. 신탁통치국면에서 신탁통치지지(자)를 국가를 소련에 팔아먹는 매국노로 규정했던 것에서(박헌영의 외국기자간담회(1946.1.5)에 대한 동아일보의 규정) 단선단정국면에 이르러, 빨갱이의 탄생이 시사하듯이, 구국(민족반역)프레임의 정착과 함께 그것이 단일한 이데올로기적 대립구도로 전환되어 사회 전반에 부식, 만연했던 것이다.

---

각서], 『동아일보』, 1948.8.29). 김동리는 한 발 더 나아가 이들이 일제강점기 때 반역(친일)의 무리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족적 윤리의 결함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다. 단선단정국면에서 사회 문화 영역은 ‘구국’을 의제로 한 좌우이데올로기의 적대가 최고조에 달했고, 그것은 한국전쟁까지 확대, 변용되어 지속되었다.

15) 채만식, 「도야지」, 『문장』 속간호, 1948.10. 모스크바삼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했고(전북문화인연맹 위원장), 단정반대서명에 참여했던 채만식의 민족주의적 지향이 이 시기 그의 풍자소설의 중요한 원천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빨갱이’가 1948년의 대표적인 유행어였다<sup>16)</sup> 것이 그 방증이다. 따라서 5·10선거에서 외세 추종의 단선단정세력의 낙선을 돼지의 낙선으로 희화화하면서 그 지당함을 역설하고, 빨갱이를 사어사전에나 등재되어야 하는 것으로 희망한 채만식의 풍자적 형상화는 자주적 통일국가수립을 신념으로 했던 중도파민족주의의 좌절 혹은 또 다른 도전으로 읽힌다.

실제 단정수립으로의 귀결과 유엔의 승인을 통해 대외적 정통성을 인정받기까지의 기간은 좌우를 초월해 국내의 모든 세력에게 기회/위기의 양면성을 지녔다. 소수파였던 극우세력이 반역이데올로기 공세를 통해 열세를 만회하면서 회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문화영역 또한 ‘유엔결의에 따른 총선거에 대한 희망적인 사회정세를 반영해 좌익진영, 중도파에 대한 예리한 반격을 개시’<sup>17)</sup>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민의를 저버린 반민족적인 단선, 단정은 이승만정부의 불안정성을 구조적으로 배태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 민족국가수립에 대한 기대의 좌절과 함께 친일파 척결, 토지개혁 등 민주주의 혁명의 핵심과제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미군정과 이승만정부에 대한 팽배한 불만이 폭발하면서 대중적 저항을 광범하게 야기한다. 정부수립 후에도 단정 반대운동이 지속되었고, 극우반공체제 확립을 통해 난국을 돌파하려는 권위주의통치가 강행되면서 오히려 불안정성이 가중된다. 제헌헌법에 의거한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1948.9)과 반민특위 설치에 따른 친일부역처리의 공식화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명분론도 이를 완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1949년 7월 유엔한국위원단의 (만장일치)보고서에 따르면,<sup>18)</sup> 한국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아진 것이 전혀 없으며, 대내의 반란과 계속적인 38선 충돌의 위협으로 한반도문제의 해결에 유효한 진전이 있을 수 없음을 특별히 강조한 가운데 미소 냉전대결이 이 모든 난관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세계 냉전과 한국문제 해결이 밀접하

16) 진덕규 외, 『1950년대의 인식』, 한길사, 1981, ‘해방15년 연표’.

17) 조연현, 「해방문단5년의 회고 ③~④」, 『신천지』, 1949.12~1950.1.

18) 「유엔한위보고서 개요와 결론」, 『동아일보』, 1949.9.10~14. 유엔한위는 이승만정부가 정치적 지반을 광범하게 다진다면 한반도의 통일 달성에 더 유효한 역할을 하리라는 다소간의 믿음을 표명했다. 극우세력은 이 보고서에 대해 중재자로서 유엔한위의 무능, 무기력, 변명에 불과하며, 특히 유엔한위가 소기의 임무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남한정부에서만 찾는 것과 남북협상파의 포섭을 암암리에 중용함으로써 소련에 대한 유엔한위의 공포심과 좌익에 대한 호의를 암시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유엔한위보고서」(사설), 『동아일보』, 1949.9.13.

게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 규정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적시한 것이다.

반면 단선단정저지를 위해 총력적인 구국투쟁을 전개한 좌익계열은 단정수립을 계기로 치명적인 위기상황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1947년 미군정의 8월대공세로 합법적 활동이 대부분 봉쇄된 상태였고, 미군정의 남로당에 대한 불법단체 선포로(1948.2) 공세적인 검거, 테러, 전향공작이 시행되었으며 국가보안법 공포 직후 남로당을 비롯한 좌익계열의 자수, 전향을 권고하는 수도경찰청의 포고문 발표(1948.12.8) 등으로 연속되는 공세적 탄압국면에서 실질적인 조직 활동이 불가능한 지경이었다. 좌익계열뿐 아니라 정부를 불승인하고 반대하는 중도파와 남북협상에 관계했던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선포가 전국적으로 실시됨으로써<sup>19)</sup> 중도파민족주의 세력의 단정반대운동도 결집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적어도 남로당을 포함해 133개의 좌익, 중도파민족주의계열의 정당 및 사회단체는 공보처에 의한 정당등록취소처분(1949.10.19) 이전까지는 불법단체가 아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단정반대세력에게는 월북, 지하공작, 전향(단정지지) 등의 현실적인 선택지가 주어졌다. 상당수가 월북했으며 탈당선언과 전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전향은 주로 서울지검정보부와 수도경찰청을 경유한 탈당성명서 발표로 이루어진다. 두 가지 형식으로 발표되는데, (평택)좌익단체간부 14명의 탈당성명서 발표(1948.1.10),<sup>20)</sup> 8·15폭동사건관계자 8명의 남로당탈당성명서 발표(1948.2.20)와 같은 민주주의 민족전선, 남로당, 문련 등 주요 좌익단체 맹원들의 집단적인 전향과 민전중앙위부의장 겸 남로당전북위원장 백용호의 탈당성명서(1948.5.17), 고인석의 남로당탈당성명서(1938.3.14) 등 개인적 차원의 전향선언이 대두하여 잇달았다. 국민보도연맹 발족 후 본격화된 전향공간에 앞서 좌익계열의 전향이 일찌감치 시작되었던 것이다. 당시 성행했던 정치인들의 정당탈당성명서, 특히 단선단정에 대한 노선 차이에 따른 정파적 갈등으로 촉발된 탈당선언과는 분명히 다른, 사상전향이 자발적/(반)강제적으로 실시되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도파 민족주의계열 또한 정부수립을 고비로 분열, 분화가 두드러지는데, 특히 남북협상에 참여했던 한국독립당, 사회

19) 「경인지구 돌연 검거 선포」, 『경향신문』, 1948.11.6.

20) 발표된 탈당성명서 전문은 “민전과 남로당의 노선이 반민족적인 동시에 매국적인 점을 지적 반성하여 우리 평택군 유지 일동은 탈당하는 동시에 지하에서 준동하는 비양심적인 분자에 대해 용감히 투쟁하여 분쇄할 것을 맹세한다.”(『동아일보』, 1948.1.13). 탈당참여자는 민주주의민족전선, 남로당, 노동조합, 농민조합, 여성동맹, 민애청 등 당시 중요 좌익단체간부들이었다.

민주당, 근로대중당 등 정당사회단체들이 신생정부에 대한 지지·협력/비판·부정으로 분열되면서 정치적 입지가 현저히 위축되었다. 축출했던 정당탈당성명서의 대부분은 단정지지·협력으로 돌아선 세력에 의한 것이었다.

이 같이 단선단정국면은 때 이른 냉전질서의 대외·내적 규율 속에서 민족국가수립과 관련한 의제들의 압축적인 분출과 이데올로기적 대결을 거쳐 분단의 제도화로 귀결되었다. 이 국면에서 새롭게 제기된 쟁점들, 미해결·미정형의 문제는 정부수립 후 극우반공체제의 형성과 맞물려 전개된 극심한 내전을 통해 조정되는 과정을 밟는다. 특히 국가보안법제정을 계기로 반란(역), 전향, 부역 의제가 한층 강화된 냉전적 진영대립과 결합해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의미 변용과 계기적 연쇄를 거치며 한국사회에 전일적 냉전구조를 고착시킨다. 이러한 의제들의 이데올로기적 확장성은 내부 냉전을 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疑似사회합의적 냉전인식의 만연과 내면화를 촉진시킴으로써 한국사회 전반에 냉전금제가 제도화되기에 이른다. 그 과정에서 문화(인)의 기여가 막대했다.

## 1. 항쟁, 반란과 학살의 재현 서사

제주 4·3항쟁과 여순사건은 사건의 계기적 연관성에서뿐만 아니라 해방 후 통일 민족국가 수립에 대한 기대의 좌절로 발생한 아래로부터의 민중적 항거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주지하다시피 두 항쟁은 남로당의 극좌적 투쟁에 의해 촉발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sup>21)</sup> 짧은 시간 안에 지역주민이 대거 가담한 대중적 항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봉기의 발발과 진행과정에서 성명된 바와 같이, 친일파 처리, 토지 개혁, 단선단정 반대, 미군철수, 동족상잔 반대 등 대다수 민중들의 민족(주)주의적 열망이 저항의 동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제주 4·3항쟁과 여순사건은 “당대 남한의 축소판”이자 민간인 대량학살과 극우반공체제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현대사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sup>22)</sup> 특히 여순사건은 각별하다. 사건

21) 북한에서의 여순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또한 남로당 일부 조직의 좌경모험주의 전술에 의해 일어난 폭력투쟁이며, 그로 인해 당 조직, 당원, 군중에게 커다란 피해와 해독을 끼친 것으로 비판되었다고 한다. 신평길(전 조선노동당 간부), 「남로당과 여순반란 사건」, 『북한』, 북한연구소, 1994.9, 93면.

의 명명법부터 달랐다. 제주 4·3이 대체로 ‘폭동’으로 명명된 반면 여순사건은 처음부터 ‘叛亂’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었다. 폭동과 반란은 법률적 의미가 다르며 따라서 법적 처벌 수준에도 큰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여순사건에 대한 특정한 사회대중적 인식을 주조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쳐 실제규명의 접근조차 봉쇄시켰다. 제주 4·3 사건이 ‘제주 4·3특별법’(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1991.1) 정부의 사과와 함께 진상조사, 희생자 신고, 유해발굴사업, 희생자 명예회복 등이 공식적으로 추진되는 도정에 있다면,<sup>23)</sup> 여순사건은 냉전이데올로기의 굴레를 벗지 못한 가운데 여전히 역사의 어둠에 묻혀 있는 실정이다.<sup>24)</sup>

여순사건은 사건 발생 당시부터 공산주의(북한공산당 괴뢰정권)의 계획적 음모에 의해 발생한 반란으로 규정되었다. 10월 21일 국무총리 이범석의 발표문에서부터 시작된 이승만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여순사건이 단순히 남로당의 지하활동에 의한 프락치들의 반란만이 아니고 정부를 반대하는 반이승만계의 일부 극우정객, 공산주의에 부화뇌동한 불순인민분자들이 북한과 합작해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반역사건이었다. 과장, 謀害가 강하게 개입된 이승만정부의 이 같은 정략적인 대응 태도, 즉 극좌/극우 합작음모론은 정부책임론을 방어하고 김구를 비롯한 우익진영 내부의 정부 반대세력을 제거하는 도구로 활용하였다. 또한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하고, 군경의 폭력적 진압에 면죄부를 주었다. 불법적인 계엄령하의 진압과 토벌은 가혹했다. 이승만은 몇 차례의 담화발표를 통해 반란자들에 대한 엄중 처단을 거듭 천명한 바 있다. 처음에는 반란군의 동족 살해의 학살과 내란을 강조한 가운데 소상한 증거에 따라 주동자, 협력자들을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sup>25)</sup> 이후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여 “각 학교와 각 정부기관에 모든

22) 서중석, 「이승만과 여순사건」, 『역사비평』 86, 역사비평사, 2009.2, 304면.

23) 최근(2019.1.17) 제주 4·3사건 생존수형인 18명의 재심사건 선고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4·3사건 당시 군사재판이 별다른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져 재판 자체가 무효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내란죄 등 누명을 쓴 재심청구 생존수형인 18명이 사실상 무죄로 인정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제주 4·3사건에 대한 진상 복원에 진일보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24) 최근(2019.3.27) 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사형이 선고, 집행된 민간인 사망자 3명에 대한 재심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사건 발생 71년 만에 여순사건 민간인사망자에 대해 재심을 확정된 첫 사례로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의 물꼬를 텃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의의가 있다.

25) 「반도는 엄중처단」, 『경향신문』, 1948.10.29.

지도자 이하로 남녀아동까지라도 일일이 조사해서 불순분자는 다 제거하고 조직을 엄밀히 해서 반역적 사상이 만연되지 못하게 하며 앞으로 어떠한 법령이 발표되더라도 전 민중이 절대 복종해서 이런 비행이 다시는 없도록 방위해야 될 것”<sup>26)</sup>이라는 지침을 하달한다.

이미 여순사건 진압이 완료된 10월 27일부터 전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군경의 부역자 심사가 개시되어, 부역자, 협력자, 가담자, 동조자를 색출하고 즉결총살을 비롯한 광범위한 학살이 자행되었다. ‘손가락총’으로 일컬어지는 부역자에 대한 심사는 외모나 다른 사람의 고발, 개인적 감정에 의한 중상모략, 강요된 자백 등의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자비했고 또 억울한 희생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었다.<sup>27)</sup> 속결처단주의가 민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재판 절차 없이 11,000여 명에 달하는 학살이 이루어졌고(진상위원회 측의 추산) 누가 죽었는지, 누가 죽었는지, 왜 죽어야만 했는지도 불분명한 채 그 주검은 야산에 유기되어 방치되었다. 여순사건에서의 민간인 대량학살은 지역공동체를 파탄시켰을 뿐만 아니라 빨갱이의 양산을 수반한 채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 죽어야 한다.”는 인식을 사회·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가운데 이후 민간인학살의 기초를 마련했다는데 심각성이 존재한다. 빨갱이는 학살의 명분과 이유가 되었고, 학살을 거치며 빨갱이는 내부의 적인 공산주의자로 재차 단죄되는 악순환 구조가 여순사건 처리 과정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국가보안법의 제정을 통해 법적으로 뒷받침되었으며, 국가보안법 틀 속에서 사회 전 부문에 확대, 정착되기에 이른다. 국가보안법은 이승만이 담화를 통해 천명했듯이 반역사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여순사건을 계기로 전격 제정·공포되었으며, 절대 복종이 강제되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정통성을 보지하고 국초를 공고히 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나,<sup>28)</sup> 졸속입법도 문제이려니와 실제

26) 「학동까지 엄중 조사 처단」, 『경향신문』, 1948.11.5.

27) 『아픔, 기억 그리고 치유』(여순사건 제70주기 추모 전국문학인여수대회), 2018.10.29, 214면. 당시 부역자심사는 전 지역민을 반란군으로 취급한 가운데 모두 학교 운동장에 모이게 한 뒤 경찰우익청년단원이 혐의자를 손가락으로 지목하고, 사건가담자는 즉결처분장에서 개머리판, 참나무 몽둥이, 체인으로 타살하거나 곧바로 총살했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수용되어 재심사를 받거나 계엄군이나 경찰에 넘겨져 심문과 재판을 받았다. 심사 방법은 교전 중인 자, 총을 가지고 있는 자, 손바닥에 총을 쏜 흔적이 있는 자, 흰색 지까다비(地下足袋)를 신은 자, 미군용 군용팬티를 입은 자, 머리를 짧게 깎은 자 등이었다.

28) “삼천만 국민의 총의와 국제연합의 결의에 의하여 정통적으로 성립된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존재를

작동은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정부를 부인하고 북한을 지지, 찬양하는 좌우와 중간을 막론한 모든 세력을 차단, 제거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남북분단의 법제화와 냉전 반공 프레임의 제도화시킨 국가보안법의 규율 아래 대한민국은 극우반공체제로 급속하게 재편되면서 반공은 모든 국민의 생존을 좌우하는 이데올로기적 기제가 된다. 요컨대 여순사건은 극우반공체제로 진입하는 촉진제 역할을 했으며, 공식적으로 토벌이 완료되는 시점까지(1954.4) 지리산공비토벌, 제2, 제3의 여순사건<sup>29)</sup> 등의 명명을 통해 재생되어 내부평정작업을 뒷받침하는 이념적 도구로 이용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반란의 대명사로 고착, 각인되었다.

그런데 여순사건이 반란의 대명사로 인식·고착되는 과정은 국가권력이 처음부터 구사해 조장시킨 냉전반공프레임이 주효한 것이었으나, 여순사건에 대한 다방면의 재현작업이 더 크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sup>30)</sup> 언론, 문학(인), 사진, 영화, 미술, 종교 등 다양한 분야와 미디어에 의해 재현된 여순사건은 기본적으로 국가권력의 입장을 철저히 대변하거나 옹호한 것들이었다. 언론(신문, 잡지 등)은 사건의 원인, 경과, 성격 등 여순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사상한 채 획일적 반공프레임을 의제로 설정하고 왜곡, 과장의 편파적 보도로 일관했다. 대체로 폭력, 파괴의 생지옥을 낳은 반란이란 보도를 기조로 민족 나아가 인류의 적(빨갱이)이란 이미지 창출과 타자화의 당위성, 비인간화담론 등을 반복적으로 양산하면서 섬멸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설파하였다. 기사, 사설과 함께 신문의 여순사건 재현에 중요한 장치로 활용된 사진, 화보도 반란군이 자행한 파괴와 학살의 참상을 특화시킨 장면들뿐이었다. 어쩌면 언론보도의 편파성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공보처가 여순사건에 대한 일체의 신문보도를 중지시키고(외국통신으로 입수된 것도 포함), 10월 21일 정오부터 정부의 공식 발표만 기사화하도록 강제함으로써<sup>31)</sup> 신문보도는 정부 입장이 일방적으로 관철될

---

부인하거나 비합법적인 정부도피 또는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괴뢰정권을 시인 추종하기 위한 모든 결사집단을 금단하여 국가 기초를 공고케 함이 목적이다.”(법무장관 담화, 1948.12.1).

29) 예컨대 육군 정보국이 1950년 3월 반란(예비)음모자 196명을 체포한 뒤 이 사건을 제2여순사건으로 명명한 바 있다.

30)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여순사건과 반공국가의 형성』, 선인, 2009. 김득중의 연구는 여순사건의 재현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여순사건의 발생, 경과, 귀결, 영향, 성격 등 사건의 전모를 종합적으로 정리, 분석해낸 독보적인 저작이다. 본고의 여순사건에 대한 접근은 김득중의 연구에 힘입은 바 크다.

31) 「여수반란사건은 발표 외 보도금지」, 『자유신문』, 1948.10.22.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가 공급한 기사에만 의존한 언론의 왜곡 보도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압군/반란군 양쪽의 사정을 충분히 조사해 사건의 진상을 공정하게 알리려는 시도가 일부 언론인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으나, 그것은 일부 잡지를 통해서만 발표될 수 있었다.<sup>32)</sup> 신문보도의 편파성이 언론통제와 정부수립 후 더욱 엄격해진 검열에 의한 것만은 아니었다. 이와 더불어 즉자적 정파성에 침윤된 당시 언론 풍토 속에서 정부의 이데올로기적 공세에 공명한 가운데 자발적으로 반공프레임을 확대 강화시킨 혐의가 크다. 극우언론의 반공노선은 여순사건을 반란(역)으로 규정하는 수준을 넘어 점차 민주주의/공산주의의 냉전적 진영 대립의 본보기로 설정하여 냉전 전쟁의 승리를 위한 발판으로 전용시켜 나갔다.<sup>33)</sup>

여순사건의 재현은 관민협동의 차원, 예컨대 문교부와 문(화)인조사반 파견, 사회부와 종교대표단 파견, 공보부와 기록영화 제작 및 선전계몽대 파견 등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좀 더 조직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문인들의 재현작업이다. 문교부의 의뢰로 조직된 ‘반란실정문인조사반’은 두 반으로 편성되어(제1대: 박종화, 김영랑, 정비석, 김규택, 최희연, 제2대: 이헌구, 최영수, 김송, 정홍거, 이소녕) 진압 후인 11월 3일부터 6일 간 여순 일대를 현지 시찰한 뒤, 보고서를 중앙일간지에 연재하였고,<sup>34)</sup> 이를 묶어 문충의 이름으로 『반란과 민족의 각오』(문진

32) 대표적인 사례로 『신천지』 3-10(1948.12)의 〈여수순천지구반란사건의 진상!〉기획이다(설국환, 「반란지구답사기」, 흥한표, 「전남반란사건의 전모」). 연합통신특파원 자격으로 사건발생 직후 10일 동안 종군한 뒤에 작성한 설국환의 답사기에는 서울에 알려졌던 사건발생 원인, 즉 공산당원과 극우파의 공동모략과는 다른 여러 진상들, 이를테면 군경의 갈등과 군의 비상사적인 反警감정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고, 진압군 측의 조작된 정보가 많았으며, 순천여수에서 반군과 반도가 자행하던 부녀자, 노인의 시체는 찾아볼 수 없고 시체 파괴도 별로 볼 수 없었으며, 양군철수, 남북통일을 주장한 측의 인물이 피살되지 않았다는 사실, 반란주동자들이 지리산입산을 미리 계획하고 있었고, 사건전개의 정황상 가담혐의자를 정확히 분별해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등을 알려주고 있다(146~155면). 민주일보사특파원 자격으로 내외언론의 보도와 현지에서 직접 견문한 것을 종합해 진상에 접근하고자 한 흥한표의 글에서도 극우진영과 공산분자의 야합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군경간의 반감이 사건 발단의 일 원인이었고, 반란지구에 물가등귀가 없는 특징과 감정적 보복과 극심한 공포증이 만연되어 있으며, 신문기자들의 보도 대부분이 양편의 사정을 충분히 조사한 정보가 아니라라는 점에서 진압군과 언론인의 공모관계가 뚜렷하며, 특히 반란측이 전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한다(158~166면). 사건의 진상을 객관적으로 접근하려는 현지보고가 실릴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신천지』가 중도파민족주의 계열의 매체 거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33) 「여순사건의 교훈」(사설), 『동아일보』, 1949.10.20.

문화사, 1949.1)를 출간했다.<sup>35)</sup> 문인조사반의 재현은 개인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애초의 취지, 즉 ‘현지의 참담한 실상을 답사하고 살피 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근인을 파악’<sup>36)</sup>하는 것과 달리 철저히 진압군의 시선(입장)으로 반란군의 악행과 죄상을 고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단행본을 통해서 살펴보면, 반란군은 ‘잔인무도한 식인 귀족 야만의 행동’(박종화), ‘잔인무도한 鬼畜들, 천인공노할 귀족의 소행들’(이헌구), ‘잔인, 怪惡無雙’(고영환), ‘인간성 상실, 저주의 보상’(김광섭) 등 악마로 표상되었으며 그것이 반란군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과 시체들, 방화와 파괴로 인한 폐허의 참경들, 가족을 잃은 부녀자, 소녀의 울부짖는 모습, 전재민의 모습, 체포된 포로들 등의 편파적 사진화보와 같이 게재되어 악마적 이미지를 한층 뚜렷하게 부조시킴으로써 반란군은 민족의 적, 인류의 적이라는 의미를 창출하는 동시에 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응징(학살)해야 한다는 논리를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한다. 귀족, 악마이기에 반란군은 “한 하늘 아래 두고는 살 수 없는”(이승만) 존재였다. 진압군 및 정부의 정보에 의존한 반란지구의 인명, 주택 등 피해상황에 대한 상세한 수량적 재현 또한 재현의 객관성을 높이며 여순사건(반란군)의 폭력성을 증폭시킨다. 무차별적인 부역심사에 대한 우려와 정부당국의 관대한 아량을 주문하거나(정비석), 사건의 발생을 예방하지 못한 당국의 책임을 부분적으로 거론한 경우가(고영환) 없지 않았으나 정부의 공식적 입장에서 벗어난 수준은 아니었다.

문인조사반의 재현이 중요한 것은 많은 연구자가 주목했듯이, 문인들의 사건 재현이 구상적, 상상적, 감각적이어서 정서적인 호소력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실제 이들이 주도해낸 감각적 이미지는 냉전반공프레임을 확대, 심화시키면서 정부의 공식 입장을 옹호, 뒷받침하는데 다대한 기여를 했다. 신문이 문인조사반의 현지보고를 경쟁

34) 박종화, 「남행록」(『동아일보』, 1948.11.14~21, 6회), 이헌구, 「반란현지견문기」(『서울신문』, 1948.11.16~26, 9회), 최영수, 「문교부파견현지조사반」(『경향신문』, 1948.11.13~16, 3회), 정비석, 「여순 낙수」(『조선일보』, 1948.11.20~23, 6회).

35) 단행본 『반란과 민족의 각오』는 문인조사반의 신문연재의 글을 재수록 했을 뿐만 아니라 재수록을 중심으로 김광섭, 이승만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의 글(3~18면), 참상을 담은 사진화보(19~30면), 김영랑의 시 2편(「절망」, 「새벽의 처형장」)과 왜곡, 과장보도에 앞장섰던 중앙일간지의 주요 사설(125~134면), 피해현황 결산(139~142면) 등을 앞뒤에 각각 배치함으로써 당시 여순사건 재현의 종합적 체계화와 함께 이 같은 구성상의 특징으로 인해 여순사건에 대해 반란이란 단일한 표상을 획득하는데 이점이 있었다.

36) 박종화, 「남행록①」, 『동아일보』, 1948.11.14.

적으로 실은 것도 정부입장을 그대로 대변했던 보도의 신뢰성을 보강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이와 관련해 김영랑의 시적 형상화가 두드러진다. 김영랑은 『반란과 민족의 각오』에 실린 두 편 외에도 「새나라」(『동광신문』, 1949.1.1.), 「행군」(『민족문화』 1권, 문충, 1949.1) 등 여순사건의 시적 형상화를 가장 많이 한 작가이다. 시적 형상화의 기초는 반란군의 만행을 절절히 묘사하여 잔혹성을 고취하는 가운데 그들을 반역자로 단일하게 표상함으로써 혐오, 증오, 적대의 대상으로 부각시킨다. 친족살해, 즉 아우가 형을, 조카가 아재를 죽인 반인륜적 범죄자(금수)로 반복 재생해 혐오를 극대화시킨다. 김영랑의 이 같은 시적 재현은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는 공식성을 정당화하는 수준을 넘어 여순사건의 가해자로 평가하기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과격했고 편향적이었다.<sup>37)</sup> 당시 문화적, 대중적 영향력을 갖춘 김영랑이기에(다른 문인들도 마찬가지) 그의 시적 재현이 지닌 파급력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재현의 감각적 이미지화가 가장 뛰어난 분야인 영화와 사진의 재현에서도 사건의 잔혹성을 일방적으로 부각시키기는 마찬가지였다. 영화적 재현은 주로 35밀리 기록영화로 제작되어 선전(홍보) 수단으로 활용되는 특징이 있다. 선전의 주관부처인 공보처가 기록영화에 대한 검열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1949년에는 문교부예술과의 시설관계로 공보처가 일반영화에 대한 검열을 일시 맡아보았다). 「여수순천반란사건」(중앙영화사, 선동호 제작/김학성 촬영)은 여순사건이 진압된 직후 여순사건 당시 내무부, 국방부의 후원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반란현지의 참상을 기록한 영화이다. 수도권극장과 국도극장에서 11월 15일 개봉되었는데, 필름이 남아 있지 않아 내용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한 시민의 감상을 통해서 주로 반란군이 자행한 학살, 파괴 등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sup>38)</sup> 1949년에는 「지리산작전」, 「여수순천사건」 두 편의 여순사건관련 기록영화가 제작되는데, 전자는 육군본부보도과영화대가 지리산진압작전을 5개월 동안 촬영한 것으로 1949년 8월 3일부터 부산지역에서 일반인에게 공개 상영했다는 기록 정도만 알려져 있다(『민주중보』, 1949.7.30.). 후자는 제작기록만 확인될 뿐이다.<sup>39)</sup> 영화적 재현을 대표하는 것은 여순사건을 최초로 영화

37) 이에 대해서는 이동순, 「여순사건의 시적 재현양상」(『아픔, 기억 그리고 치유』, 15~24면 참조.  
 38) 박병래, 「책입」, 『경향신문』, 1948.11.27. 기록영화 「여수순천반란사건」을 본 후 시체의 참혹함과 건물 파괴, 화재 및 탄자의 흔적이 떠올라 전율을 일으켜 잠을 이룰 수 없었으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반란군의 야수성에 책임을 묻고 있다.  
 39) 1949년에는 총 7편의 35밀리 기록영화가 제작되었는데, 그중 눈에 띄는 작품이 제주 4·3사건을

화한 「성벽을 뚫고」(한형모 감독)이다. 국도신문사가 주최한 제1회 영화제 기획당선작으로 국방부와 공보처가 지원했고 보병5사단3연대가 출연했다. 이 영화는 여순사건을 배경으로 처남(이집길, 현역 육군소위)/매부(김영팔, 공산주의자)간의 이데올로기적 대립관계를 통해서 천륜마저 저버린 공산주의자의 반인간성을 폭로한 반공영화이다. 군사영화의 신경지를 개척했다는 평가가 있으나,<sup>40)</sup> 이 작품은 공산주의(자)를 비인간화시키고 패륜아로 묘사한 당대 여순사건 재현의 정형화된 내러티브를 반복, 확대하고 있다. 1949년 11월 29~30일 시공관에서 시사회 겸 일반공개 뒤 전국순회 상영되었으며, 서울에서는 중앙극장, 수도극장에서 개봉되어 흥행에 대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에서, 영화의 전국성과 대중적 전파력을 감안할 때, ‘반란’으로서의 여순사건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나아가 공산주의에 대한 막연한 공포, 증오, 적대를 조장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사진 또한 여순사건의 재현에서 상당한 비중과 영향력을 지녔다. 『반란과 민족의 각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진은 사진으로서 뿐만 아니라 신문(잡지), 단행본, 회화, 선전물에 이용되어 정보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는 이미지였고 따라서 활용도가 높았다. 여순사건의 사진 재현은 대부분 반란군이 자행된 학살, 파괴의 참상을 담았다. 당시 생산, 유포된 국내신문의 사진을 분석한 김득중의 연구에 따르면, 반란세력에 의한 건물파괴와 인명살상의 비중이 40%가 넘고 국군의 위용 과시, 국군 활동을 다룬 것이 많은데 비해 부역자(협의자) 색출이나 참화를 겪은 주민생활에 관한 사진들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그 부분은 외국인기자의 사진에서나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sup>41)</sup> 진압군의 시선이 일방적으로 반영된 것은 검열로 인해 다른 시선의 사진보도가 차단된 데 일차적인 원인이 있으나, 사진 본래의 속성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 사진은 시각적 특징이미지의 극대화/은폐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입장과 이에 적극 동조한 사진예술가의

---

다른 「한라산전투기」이다. 이북학생위원회가 자체 제작하고 관계부처, 우익정당사회단체들 및 신문사들의 후원을 받은 이 기록영화는(1950.4.24, 시공관 상영) 제주 4·3사건을 적색반란사건으로 규정하고 적색분자의 횡포와 제주도상륙작전 및 소탕작전을 기록하고 있다. 애국/매국의 프레임으로 제주 4·3사건을 의미화하려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필름은 전해지지 않는다). 「한라산전투기」상영에 대한 공개장, 『동아일보』, 1950.4.10 광고란.

40) 오영진, 「예술의욕의 감퇴(하)」, 『경향신문』, 1949.12.22.

41) 김득중, 앞의 2009 책, 381~391면 참조.

여순사건 인식으로 말미암아 진압군의 입장이 전폭적으로 극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거짓말을 하는 객관적 이미지’로 불리기도 하는 사진의 특성상 사진은 그 어느 미디어보다 여순사건 재현을 통한 비국민 창출의 효과적 장치가 되었다. 여기에는 당시 대중독자들의 리터러시 수준을 감안할 때 사진화보가 영화와 함께 수용력이 클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도 아울러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sup>42)</sup>

문제는 문인조사반을 비롯한 각종 미디어의 언어적, 수량적, 구상적 재현 등이 결합적으로 구현된 재현작업이 여순사건의 본질적 문제를 도외시켰다는데 있다. 임종명이 다각도로 분석한 바와 같이, 당시 구사된 다양하고도 뛰어난 재현전략과 전술이 여순사건을 개인과 가족, 한민족, 인간 자체에 가해진 폭력으로 전환하여 궁극적으로 그것을 반가족적, 반민족적, 반인류적, 반근대적 폭거로 등식화하면서 여순사건의 역사성을 탈각시키고 대한민국 자신을 민족이익의 옹호자로 형상화하여 자신의 통치와 권위를 정당화하고 나아가 자신의 민족국가성을 시현하는 것으로 전용시켰다.<sup>43)</sup> 여순사건의 역사성의 탈각 내지 소거는 여순사건의 재현과 그 의미 전용의 구조음이었다. 김득중을 비롯해 많은 연구가 지적하고 있듯이 여순사건은 그 자체로 복합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일부, 특히 반란이 사건 전체를 표상할 수도 대표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반란이란 단일한 표상과 적이란 의미 전용은 재현에서 피해자의 시선 부재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는 여순사건을 정면으로 다룬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실제 피해자의 시선은 공표될 수 없었다.<sup>44)</sup> 피해자의 입장을 완곡하게 담은 가요

42) 당시 사진의 재현에서 국제보도연맹사의 활동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중일전쟁 때 일본군중군화가로 참가했던 송정훈이 주재한 국제보도연맹사는 화보사진 중심의 기관지 『국제보도』(1946.2 창간)와 자매지 『세계문화』(1948.11 창간)를 통해 여순사건 사진을 많이 게재한 바 있다. 또한 미공보원의 후원으로 종합보도전을 지속적으로 열었는데, 여순사건 직후에는 관련 사진보도전을 개최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실물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나, 국제보도연맹사가 1948년 10월부터 『라이프』지, 『타임』지의 한국총대리점으로 지정된 뒤 국내외 기록사진, 뼈라, 포스터, 선전물의 교류, 게재, 전시가 더욱 활발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여순사건 관련 사진의 국내외 전파에도 깊이 관여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국제보도연맹사는 3.1운동 당시 사진을 엮은 『조선독립의 길』(1947.5), 4.3사건 후 제주도 현지보고서인 『평화의 동경』(1949.6) 등을 출간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43) 임종명, 「여순사건의 재현과 폭력」, 『한국근현대사연구』 32, 한국근현대사학회, 2005. 여순사건의 재현에 관한 집중적인 연구는 임종명에 의해 다각도로 수행되었는데, 「여순 ‘반란’ 재현을 통한 대한민국의 형상화」, 『역사비평』 64, 역사비평사, 2003; 「여순사건의 재현과 공간」, 『한국사학보』 9, 고려사학회, 2005 등이 있다.

「여수야화」(아세아레코드사, 이봉룡 작곡/남인수 노래)는 발표직후 서울시경에 의해 가사가 불순하고 민심에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불온레코드로 규정되어 판매 금지, 공연금지, 방송금지 처분을 받았고(정부수립 후 최초의 금지곡),<sup>45)</sup> 이후 여러 차례 작성된 금지곡목록에서도 완전히 배제되었다. 여순사건의 소설(문학)적 형상화도 빨치산을 통해 우회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제한되었다.<sup>46)</sup>

이렇듯 여순사건은 처음부터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으로 성격 규정되고 이를 정당화하는 재현의 반복적 재생을 통해 비국민(빨갱이)/반공국민을 창출하는 가운데 이승만 정권 및 한국사회 전반을 극우반공체제로 재편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그 일련의 과정은 사회문화 각 부문에 내부냉전을 조장, 정착시키는 과정을 수반했다. 문화영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어느 부문보다 두드러져 증오, 적대의 치열한 내부냉전을 거치며 문화계 재편의 동력으로 작용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문충이 주최한 ‘민족정신양양 전국문화인총결기대회’(1948.12.27.~28, 시공관, 이하 문화총결기대회)이다. 문충은 좌익신문예조직인 조선문화단체총연맹에 대해 고립 분산되어있던 29개의 우익 문화단체를 통합해 결성되었다(1949.2.12). 문충이 열세를 만회하고 강력한 우익문예조직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단선단정세력과의 정치적 결탁으로 인해서다. 특히 여순사건은 문충이 문예조직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44) 물론 진압군의 입장도 국가의 공식 기록(기억)과 배치될 경우에는 공표될 수 없었던 것은 마찬가지였다. 최근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가 1960-1980년대 진압군을 면담해 작성한 증언록이 처음 공개되었는데, 증언록의 요지는 좌익부역자(협력자)들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당시 진압군측이 민간인을 잔혹하게 학살했다는 것이다.

45) 「불온 레코드 ‘여수야화’ 판금」, 『경향신문』, 1949.9.3. 피해자의 입장은 특히 3절의 가사, 즉 “왜놈이 물러갈 땐 조용하더니/오늘은 식구끼리 싸움은 왜 하나요/의견이 안 맞으면 따지고 살지/우리 집 태운 사람 얼굴 좀 보자”에 잘 담겨 있다.

46) 빨치산을 소재로 한 반란사건의 소설적 형상화는 매우 드물지만, 그나마도 귀순모티프를 기본 서사로 빨치산은 반란, 반역의 표상으로 부각되는 동시에 귀순을 통한 남한사회의 체제우월성을 확증하는 의도가 역력했다(허운석의 「海女」(『문예』, 1950.1, 조진대의 「生理의 승화」(『문예』, 1950.2), 박영준의 「빨치산」(『신천지』, 1952.5 등). 그런 점에서 김동리의 「형제」(『백민』, 1949.3)는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친족살해모티프를 주 서사로 한 「형제」는 널리 알려졌듯이 형제, 가족의 윤리를 저버린 좌익 반란군의 반인륜적 동족 학살을 폭로, 고발함으로써 빨갱이 절멸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가의 입장과 우익진영의 이데올로기적 공명의 문화적 산물로, 이후 냉전반공의 자료로 활용되는 가운데 여순사건에 대한 공식 기억을 공고화,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가령 1968년 국민의 재구조화를 위해 기획된 국민교육헌장의 국가주의강령을 문학적으로 뒷받침한 『새국민문고 4』(을유문화사, 1969)에 재수록).

절호의 기회였다. 문인조사단 파견이 문교부와 문총의 유기적인 협력 속에 문총의 주축멤버로 편성된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문인조사반은 형식적으로는 동원된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이념적 공명에 입각한 우익문화주체들의 문화권력 욕망이 적극적으로 발현된 자발적 참여였다고 봐야 한다. 좌익문예조직의 구국문학론, 매국문학론 공세에 맞서 쌍생아적인 냉전반공의 이념적 문학론을 정립하는 것과 동시에 냉전 반공을 구심점으로 한 총공세를 전개한 것이 문화총궐기대회였다.

문총의 문화총궐기대회 준비는 상당히 치밀했다. 133명의 준비위원과 중앙과 지방을 아우른 전 문화인을 결집시키려 각 지방에 요원을 특파시켰고 모든 보수신문사들을 회원으로 포함시켰으며, 그 결과로 500명의 초청인사 명단(『동아일보』, 1948.12.25)을 마련했다. 문화총궐기대회의 목적, 성격 등을 준비위원회(위원장; 고희동)가 밝힌 취지서를 통해 살펴보면, 47) 우선 “순천과 여수의 반란사건은 해방 후 이북의 악랄한 계획과 이남의 온상에서 육성된 공산배의 치밀하고 조작적인 학살 선동”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그 선동에 유도, 기만되어 가담한 동포들에 대한 처리가 “총검의 윤리”와 “감옥의 교화”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민족정신의 건전한 양양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그리고 민족정신의 양양은 유엔의 승인을 받은民国정부의 정통성을 수호하고 매국적 노예성의 극복과 남북통일을 달성하는데 복무하는 민주주의민족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민주주의민족화는 국가를 우선시하는 국가주의를 전제로 한 것이다. 여순사건을 이념적 지렛대로 활용하여 우익문화세력을 결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대내적 냉전전쟁을 수행하겠다는 결의를 분명하게 표명하고 있다. 48)

그 결의는 대회결정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우익세력이 총동원된 이틀간의 대회가 보수언론의 지지 속에 성황리에 개최된 뒤 6개 항의 결정서를 채택한다. 49) 결정서

47) 「민족정신양양 전국문화인 총궐기대회 취지서」, 『동아일보』, 1948.12.21. 광고란.

48) 총궐기대회 이후 무대예술원의 전국무대예술인대회 개최(1949.1.14, 중앙극장)와 같이 문총산하기구별 궐기대회 개최로 파급되었다. 전국무대예술인대회에서는 좌익예술인의 자진 투항을 권고했다. 궐기대회 후 관계당국과 문총의 공조 관계가 한층 증진되는데, 가령 무대예술원, 극장대표자들과 공보처의 간담회에서는 국헌 존중, 사상통일, 국책 수행에 대한 협조, 좌익계릴라 침투에 대한 대책, 군부의 위신과 기밀의 보전을 지시했고 무대예술원은 당시 공연계의 최대 난관이었던 입장세의 폐지 내지 인하, 검열의 완화 등을 요구한 바 있다(「좌익침투를 방지」, 『동아일보』, 1949.1.27).

49) 결정서의 전문은 『경향신문』, 1948.12.29.

의 요지는 민족의 중대한 긴급과제로 남북통일을 설정하고 이를 세계 민주주의진영의 보루인 유엔의 노선에 입각해 수행하며 그 밑바탕인 민족적 사상통일을 위해 문화인이 앞장서겠다고 자임한다. 또한 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로 민국의 정당성을 부정, 왜곡 선전하고 인공을 참칭하는 반통일, 비민족 세력과 문화내부의 적을 척결함이 긴급하다고 천명한 뒤 『신천지』, 『민성』, 백양당, 아문각 등 주요 언론통신출판기관을 인공 지하의 심장기관으로 지목했다. 잔여 좌파세력, 중도파세력에 대한 공격과 우파의 결집을 의도했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냉전반공의 민족주의이데올로기로 무장해 한반도 전체를 포괄하는 문화적 냉전전쟁을 개시하겠다는 선포였다.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취약한 기반으로는 비대화된 중도파를 유인해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을 등에 업고 곧바로 좌익진영의 문화기관을 붕괴시키고 파상적인(반공)이념공세와 함께 문화제도 전반을 장악하기에 이른다. 그 과정은 좌우 대결구도를 초월한 총체적인 문화적 내부냉전으로 현시된다. 요컨대 여순사건은 해방 후 첫 번째 중대한 문화사적 변곡점이었던 것이다.

## 2. 사상의 개조, 전향과 동원의 서사

단선단정 국면에서 가시화되기 시작한 전향은 국가보안법 공포 후 본격화된다. 좌익단체에 가담하고 있던 일부 간부진에 한정된 것에서 사회주의자는 물론이고 중도파, 자유주의자, 민족주의자들까지 망라된 방대한 전향이 이루어진다. 특히 대량탈당을 통해서 전향자가 속출한 것은 국가보안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sup>50)</sup> 국가보안법의 규정에 의해 해방 후 좌익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국가보안법 공포 이전까지 반대, 탈퇴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보안법의 저축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sup>51)</sup> 또한 자진방조한 자까지 처벌 대상이 되었으며(제4조), 동시에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 자가 자진 자수를 할 때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었다(제5조). 국가보안법 공포 이전까지 반대, 탈퇴하지 않은 경우까지 저축 대상으로 삼는다는 규정은 명문화된

50) 대량 탈당의 배경, 양상, 의의에 대해서는 조은정, 「해방 이후(1945~1950) '전향'과 '냉전국민'의 형성-전향성명서와 문화인의 전향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8 참조.

51) 오제도, 『국가보안법실무제요』, 서울지방검찰청, 1949, 17면.

것은 아니나 법의 운용과정에서 범위를 확대해 적용시킨 산물이다.<sup>52)</sup> 좌파와 관련된 과거경력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것이다. 이 같이 국가보안법은 적용(처벌) 대상과 범위의 과도하고 자의적인 확대로 인해서 단기간에 대규모의 범법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었고, 좌익사상과 무관한 사람들까지 (대량)탈당을 통한 전향이 강제된 것이다. 자진자수에 대한 처벌 경감의 당근책(자수 권장)도 유효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정수립 후의 전향이 이념적 무차별성과 직능, 지역을 포괄한 전국성을 보인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이전 식민지시기 전향 양상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징이다. 국가보안법은 애초부터 사상통제법의 차원을 넘어 국민의 사고와 행동 일체를 제약, 관리하는 국민통제법의 성격을 분명하게 지니고 있었다.

전향자들은 전향(탈당)성명 발표와 함께 국민보도연맹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다. 1949년 4월 창설된 국민보도연맹은 결성취의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좌익전향자들을 포섭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로 볼 때 국민보도연맹은 기본적으로 좌익전향자단체였다. 또한 중앙본부 조직구성의 체계상 정부가 주도한 관변단체이기도 했다.<sup>53)</sup> 검경(서울지검, 서울시경 등)이 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했다는 사실에서 입증된다. 그러나 국민보도연맹은 좌익전향자단체로만 보기 어려운 복합성이 존재한다. 국민보도연맹이 전향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전향자들의 단체인 것은 분명하나 전향자가 아닌 경우도 가입되었다. 가깝게는 박영희, 오영진 등도 국민보도연맹의 주요 맹원(문화실장)이었다. 이들은 전향 선언을 한 바 없고, 국가보안법의 확대된 적용범위의 대상자로 보기도 어렵다. 국민보도연맹이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 전향대상자들 넓혀 무리하게 가입시킨 바 있고, 그것이 문화 분야에도 적용되어 민족주의자와 애국적 문화인에까지 전향이 강제되면서 일부 문화인이 이복을 동경하게 하는 역효과를 야기한다는 우익진영의 비판이 제기된 바 있었으나,<sup>54)</sup> 박영희와 오영진은 당시의 행적으로 볼 때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52) 그것은 (제헌)헌법에 보장된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 것이다. 이는 특히 2차 법조내 남로당프락치 사건 재판에서 사상검사들과(선우종원, 오제도) 재판부의 침예한 갈등으로 부각되었는데, 재판부 측의 논리는 1949년 10월 19일 이전 남로당의 합법적 행위를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형사 처벌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보안법 '집유' 말썬」, 『경향신문』, 1950.3.26.

53) 국민보도연맹의 결성과 전개에 대해서는 강성현, 「전향에서 감시 동원 그리고 학살로-국민보도연맹 조직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14, 역사학연구소, 2004, 67~86면 참조.

54) 채동선, 「문화정책 우감」, 『문예』 창간호, 1949.8, 173면.

없다. 따라서 비전향자의 자진 가입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사례를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인지는 장담할 수 없으나, 적어도 문화영역에서는 이런 경우가 다수 존재했다. 여기에는 자발적인 국민보도연맹 가입과 같은 전향국면에서의 능동적 참여를 통해서 존재를 증명해내고 이를 발판으로 문화 권력을 창출, 확보하려는 문화주체들의 욕망이 깊숙이 개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국민보도연맹의 활동뿐만 아니라 전향제도의 비가시적 작동과 그 여파까지 충분히 고려해야만 당대 전향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그리고 국민보도연맹은 전향자의 포섭, 교화 단체였을 뿐만 아니라 좌익섬멸단체로서의 성격을 지녔다. 그것은 국민보도연맹이 내건 강령, 즉 북한괴뢰정부 타도, 공산주의 사상의 배격·분쇄와 함께 남북로당의 분쇄를 명시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된다. 실제 공산계열개전자포섭주간, 남로당원자수주간, 좌익자수주간과 별도로 검찰과 유기적 협조 아래 좌익근멸주간을 통해 비전향좌익세력에 대한 색출과 파괴공작을 공격적으로 전개한 바 있다. 京電(경성전기)의 사례처럼 남로당원이 장악한 전평 산하 강성노조에 대해서는 자진전향자들을 공표하지 않고 비전향자 색출의 세포요원으로 활용해 잔여세력을 소탕하는 전술도 구사했다(『조선일보』, 1949.12.17.). 당시 남로당반당세력의 동향이 최대 관심사였고 정치적 의의도 매우 컸는데(『동아일보』, 1949.10.3) 남로당자진전향자들을 파괴 공작에 유효적절하게 활용한 것이다.<sup>55)</sup> 아울러 제거의 대상에는 단정 부정, 남북통일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던 중도파민족주의세력을 비롯한 일체의 반정부세력까지 포함되었다. 이러한 기조는 공산주의 또는 오염단체로 간주된 133개 정당 및 사회단체에 대한 등록취소처분 조치(1949.10.19)를 계기로 확대 강화되었다.

한편 국민보도연맹은 나름의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전향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통제했다. 전향제도의 기본적 작동시스템은 탈당성명서의 발표를 통한 전향의 공표 → 자기비판(고백, 참회)과 공산주의의 조약상과 북한의 실정을 폭로·고발, 밀고 → 새로운 이념(일민주의, 반공주의)의 획득 → 배전의 훈련과 투쟁적 실천을 통해서 증명, 새로운 사상에 대한 신념과 이념의 육체화(일상생활, 언어활동까지 습성화)

55) 오제도도 공산주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사상이 전염되지 않도록 원인과 온상을 제거하고, 공산주의에 물들었거나 외부의 침투로 생겨난 것은 확산을 방지하고, 내부를 와해시켜 자진 협력하도록 만든다는 원칙 아래 전향자 지도방침을 설계했다고 한다(오제도, 「그때 그 일들 143」, 『동아일보』, 1976.6.22).

→ 심사 후 탈맹 → 감시와 동원이다. 국민보도연맹을 주재한 오제도가 밝힌 것을 요약한 것인데,<sup>56)</sup> 국민보도연맹이 제시했던 지도방침, 즉 ‘신념-자기반성-투쟁-배상 필벌’<sup>57)</sup>과 대체로 일치한다. 획일적 정형성을 지닌 탈당(퇴)성명서의 내려티브에도 이러한 시스템의 내용이 집약되어 있다. 이 같은 시스템이 운영된 것은 국가보안법과 내밀한 관련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가보안법의 운용과정에서 범법자가 대거 양산되었으나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수형 시설이 태부족이었기 때문에 국민보도연맹을 단일창구로 한 포섭, 교화정책이 현실적으로 필요했고, 또 이러한 조건을 고려한 국가보안법의 1차 개정(1949.12.19)이 이루어져 보도구급제가 도입됨으로써 관리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sup>58)</sup> 국가보안법과 국민보도연맹의 상호보완성은 전향제도를 통해 국민정체성을 정립하고 반공국민을 창출하고자 했던 이승만정권의 정치적 의도를 구현하는데 유용한 제도적 장치였다. 그렇다고 이 시스템이 수미일관되게 작동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감시를 통한 색출과 섬멸, 보호하고 지도하여 반공국민으로 육성하겠다는 국민보도연맹의 결성이 일선 사상검시들의 실무적 필요에서 이루어졌다는 강성현의 분석을 감안할 때 각 지회나 지방에서는 여러 변수들이 개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59)</sup> 다만 그로 인해서 오히려 전향-감시-동원의 권력테크닉이 좀 더 체계적으로 밀도 있게 구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민보도연맹의 결성과 전향제도의 시행이 사상사적 일대 변혁을 이끌어냈다는 오제도의 자평처럼,<sup>60)</sup> 전향제도는 단정수립 후 사상사, 문화사 변동의 결정적 요소였고, 그 영향력은 장기 지속적이었다. 더욱이 국민보도연맹의 조직과 운영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했던 문화 영역은 전향제도의 시스템이 잘 적용되었던 부문이면서도 일반적인 작동양상과 구별되는 독특함이 존재한다. 일례로 문화인에게는 탈맹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아울러 전향이 극심한 내부냉전의 기제로 작동하는 가운데 전향제도의 (비)가시적 효과가 전폭적으로 나타났다.

56) 오제도, 「사상전향자의 보도방침」(『애국자』 5호(1949.12.13), 『사상검사의 수기』, 창신문화사, 1957, 141~149면.

57) 「전향한 보련원 지도방침 수립-4대 기본원칙」, 『자유신문』, 1949.12.1.

58) 국가보안법의 1차 개정내용과 보도구급제의 의미에 대해서는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1-국가보안법변천사(증보판)』, 역사비평사, 2004, 105~112면 참조.

59) 강성현, 앞의 2004 논문, 87~104면 참조.

60) 오제도, 「그때 그 일들 142」, 『동아일보』, 1976.6.21.

우선 문화인의 전향 규모는 상당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해방 후 문화지형(운동)의 구조적 특성, 즉 좌우로의 분극화 현상과 그에 따른 중도파의 비대화가 초래된 것과 유관하다.<sup>61)</sup> 문화적 중도파는 뚜렷한 조직을 갖추지 못했지만 정치적 중도파민족주의계열과 이념과 노선을 같이하면서 단선단정 반대, 자주적 민족통일운동을 정부수립 후에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일부가 단정지지로 돌아섰으나 관망 혹은 정부비판의 입장을 철회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였다. 단선단정 국면에서 문화인의 전향이 전혀 없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조연현이 문련, 문화가 동맹 등의 좌파보다도 오히려 중도파를 (우익)민족문화건설의 최대 적으로 지목, 집중 공격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제정과 국민보도연맹 결성 전후로 문화인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매우 협소했다. 월북, 전향, 지하운동, 도피(밀항) 정도이다. 이념적 공세가 강화되고 공작 전향이 시행됨에<sup>62)</sup> 따라 문화적 입지가 현저히 축소된 상태에서 중도파들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자수, 전향밖에 없었다.<sup>63)</sup> 특히 남북협상을 지지, 성원하고 단선단정을 반대, 부인하는 성명서발표에 참여했던 중도파민족주의 문화인들이 전향의 표적이 되었다.<sup>64)</sup> 당시에 문화인전향자의 규모가 약 500명으로 보고되었는데(지방은 제외), 중도파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것은 필연적이었다. 3개의 중요 성명서에 참여했던 약 400명의 문화지식인 가운데 소수의 월북자(서광제, 김동석 등), 극소수의 지하공작운동(이용악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수, 체포의 과정을 거쳐 전향하는 수순을 밟았다.

61) 이에 대해서는 이봉범, 「단정수립 후 전향의 문화사적 연구」, 『대동문화연구』 64,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8, 224-232면 참조.

62) 문화계의 공작 전향은 국민보도연맹 결성 전부터 잔류 좌익문화인(단체)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가령 1949년 4월 19일 서울시경찰국과 연극 각 단체 관계자들이 좌익연예인 전향자선도책을 협의했는데, 연극인 200명이 탈당설명서를 내고 싶으나 신변의 보장이 없이는 시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동아일보』, 1949.4.23).

63) 중도파민족주의계열은 김구 암살 후 대한민국의 육성과 공산진영의 분쇄를 목적으로 1949년 8월 20일 '민족진영강화위원회'(의장: 김규식)을 창립했으나 과오에 대한 자기비판이 없고 반공전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호응을 받지 못했다.

64) 신중국이 성립되어 귀국한 한국독립당 중국동북특별당부 소속 간부 35명은 5.10선거 반대, 남북협상 참여의 김구 노선을 추종했다는 이유로 장문의 집단탈당성명서를 발표하고 전향을 선언한 바 있다(『경향신문』, 1949.9.3. 광고).

문화인 전향의 또 다른 특징은 검열이 전향을 촉진시키는 장치였다는 점이다. 국민보도연맹 설립 이전에도 좌익문화인의 탈당을 강제하는 검열이 시행되었다. 가령 서울시경이 문련 산하 각 문화단체에 소속된 예술인들로서 탈당하지 않으면 무대출연을 금지하겠다고 공포한 뒤 곧바로 가혹한 공연검열을 실시했다(『조선일보』, 1949.4.20). 본격적인 전향국면에 접어들어서도 검열은 중등교과서에 수록된 좌익(작가)작품을 삭제 조치하고(1949.10), 미자수자의 서적 발매금지 및 압수조치(1949.11), 좌익계열문화인을 3급으로 분류해(1949.11) 월북문화인(1급)의 저서를 판매금지하고 남한에 잔류하고 있는 좌파문화인(2급 29명, 3급 22명)의 경우를 전향을 표명하고 보도연맹에 가입하지 않으면 저서와 작품을 판금시키겠다고 언명함으로써 미전향자의 자수, 전향을 종용하는 강력한 회유책으로 작용했다. 1949년 11월 기점으로 판금의 일차적 기준이 좌익사상에서 월북(여부)으로 이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전체문화인규모 대비 전향문화인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데에는 검열의 압력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 문필활동이 중단된다는 것은 문인에게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검열은 전향자를 감시, 통제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전향문필가검열조치(1949.11), 전향문필가원고심사제 및 신규간행물 검열(1950.2, 치안국사찰과검열계), 원고사전검열조치(1950.4) 등의 집중적 검열을 통해 전향문화인 통제를 뒷받침해주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전향문화인들은 위장전향의 의심을 받는 가운데 네 차원, 즉 서울시경, 공보처, 국민보도연맹, 동업자들로부터 검열을 받았을 만큼 강력한 구속과 감시를 받았던 것이다. 조연현은 전향문인들이 민족문학 진영의 문학인들을 의식적으로 기피해가면서 경찰이나 국민보도연맹을 통해서만 전향을 형식적으로 표명하는 방식을 비판하는 가운데 그들의 전향이 사상적(세계관적) 전향이 아닌 신변의 안정과 보장만을 얻기 위한 형식적 전향이라는 의혹을 계속 제기했다.<sup>65)</sup> 보도연맹의 감시와 더불어 문단권력을 장악한 동료들의 강도 높고 지속적인 내부 감시, 의심은 전향자들에게 감시의 내면화를 촉진시키며 동원에 적극적으로 참여, 협력하게끔 만들었다. 중첩된 검열이 감정적 복수로 비춰지고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전향작가의 사전원고심사가 중지되고 既刊 서적 중 발매보류 중인 것은 내용을 재심사하여 발매할 수 있도록 검열을 완화시킨다(1950.4.3.). 이 같은 검열 완화는 전향문인들의

65) 조연현, 「해방문단5년의 회고⑤」, 『신천지』, 1950.2.

문필활동을 떠나서 그들이 참으로 전향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점에서<sup>66)</sup> 전향문인들에 대한 감시가 느슨해진 것이 결코 아니었다. 전향문화인에게 있어 검열은 일반 좌익전향자 출신의 보도연맹원들이 주기적으로 양심서 작성을 통해 위장전향 여부를 검증받았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화인전향은 국민보도연맹이 구사한 동원, 선전의 테크닉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전향문화인은 대부분 국민보도연맹 중앙본부 산하 문화실에 편입되었다. 문화실의 주된 임무는 반공사상의 선전, 선무공작이었다. 기관지(주간 『애국자』, 월간 『창조』<sup>67)</sup>) 발간과 이론 연구, 영화 제작도 담당했다. 문화실장은 양주동을 시작으로 박영희(사무국장), 정지용, 오영진 등 주로 문인이 맡았다.<sup>68)</sup> 문화실의 전향문화인이 반공사상의 선전사업을 담당한 것은 전향자보도지침의 투쟁적 실천, 즉 ‘경험, 지식, 특수기능을 총동원하여 최후의 목적인 대한민국 발전에 구체적인 충성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에 정확히 부합한다. 전향부녀자들은 가정을 위시한 신생활운동을 통해서 충성을 실천, 표현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으로 부과된 바 있다. 보도연맹 소속 전향문화인들은 반공시위, 국민사상선양대회(1949.12.18)와 같은 연맹 주최 선전활동에 동원되기도 했지만, 국민종합예술제, 학술강좌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선전·선무 사업이 대표적인 주 임무였다.

종합예술제의 형식으로 수행된 두 개의 동원 선전활동, 즉 <민족정신양양종합예술제>(1949.12.3.~4)와 <국민예술제전>(1950.1.8.~10)이 중요하다. 두 종합예술제는 전향문화인들이 전향을 대외적으로 재천명하고 반공정신을 고취시키려는 선전사업으로 기획된 것으로 프로그램의 구성이 비슷하지만, 대회의 주최자, 목적, 성격 등이 다르다. <민족정신양양종합예술제>는 한국문화연구소가 주최하고 문충이 후원한 대

66) 「전향문인에 관대를 요망」(사설), 『동아일보』, 1950.3.4.

67) 월간 『창조』는 반공이념지를 표방하고 1950년 5월 2일 경 편집회의까지 마쳤으나 6·25로 발간되지 못했다고 한다. 당시 편집회의에 참석한 인사로는 오제도, 정희택, 이하성(서울시경 사찰과장), 이은택(서울시경 보도주임), 박영희, 양주동, 이선근(국방부 정훈국장), 정백, 엄홍섭 등 9명이었다. 보도연맹의 운영에 김·경·군이 적극 개입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다(「이 한 장의 사진, 그때 그런 일들이 22」, 『경향신문』, 1984.1.7).

68) 박영희가 사무국장이 되면서 주요 대상으로 가입시킨 문인이 정지용, 김기림, 박태원, 백철, 배정국이었다고 한다(백철, 『문학적 자서전』, 박영사, 1975, 369면). 양주동이 문화실장이었던 것은 널리 알려졌으나 정지용, 오영진이 문화실의 활동이 가장 왕성하게 전개되었던 1950년 초에 문화실장의 중책을 역임했다는 사실은 알려진 바 없다(『문예』, 1950.3, 199면).

회로 전향문화인뿐만 아니라 전향과 무관한 우익문화인들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 대회가 중요한 이유는 민간차원의 기획에 의해 문화예술계 전체를 전향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 문화예술인들의 자진 전향을 독려·강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지리적·사상적 남북적대를 확대재생산하는 동시에 지배체제의 우월성을 배타적으로 승인·공고화하는데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기 때문이다.<sup>69)</sup> 여순사건을 계기로 열세를 만회한 우익진영의 사상적, 문화적 총공세였던 셈이다. 전향공간에서의 동원이 아래로부터 자발적인 기획으로 이루어져 위로부터의 동원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한 특이한 사례이다. 문화예술계의 불순한 사조를 일소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호평을 받았다.<sup>70)</sup> 프로그램 참여자의 변경 등 상당한 난항을 겪었으나,<sup>71)</sup> 미전향문화인의 전향을 급속히 유인해냈고, 전향작업의 선전효과를 제고하는 동시에 전향문화인들에 대한 일상적 통제(감시, 동원)의 기반을 자체적으로 마련해낸 것이다.

반면 <국민예술제전>은 국민보도연맹이 주최한 전향문화인들(단)을 총동원한 선전활동이었다. 프로그램 구성은 <민족정신양양종합예술제>와 같고 이북문화인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12명(정인택, 정현웅, 최운봉, 김정화, 이쾌대, 김한, 김용환, 손소희, 박계주, 엄홍섭, 박노갑, 김정혁)이 발표했고, 연극 「도라온 사람들」(박노아 작/허집 연출), 무용 「영원한 조국」(김막인 작·연출), 영화 『보련특보』(김정혁 기획/허규 제작), 음악연주회가 공연되었다. 입장료 300원을 받았으며, 오제도에 따르면 그 수익금은 출연자들에게 배분했다고 한다. <국민예술제전>은 국민보도연맹의 선전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사실 또 전향문화인들의 동원과 선전에 어떻게 활용되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여기에 참여한 문화인들은 탈당성명서의 공표 여부와 무관하게 전향자라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이 예술제는 전향자들이 ‘사상

69) 이봉범, 「냉전과 월남지식인, 냉전문화기획자 오영진」, 『민족문화사연구』 61, 민족문화사학회, 2016, 213면.

70) 「종합예술제의 의의」(사설), 『동아일보』, 1949.12.7.

71) 난항을 겪은 대표적인 사례는 이북문화인에게 보내는 메시지 낭독자였다. 종합예술제의 인기의 초점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경향신문』, 1949.12.5.) 메시지 낭독자는 두 차례의 사전 광고(『자유신문』, 1949.12.1. 13명/『동아일보』, 1949.12.4. 15명)와 행사 당일의 실행자(11명)를 비교해 보면 많은 변화가 나타난다. 대부분 전향자에게 강요된 것으로 인간적 모멸이 매우 컸을 것이다. 정지용, 정인택, 김만형, 김기림, 장추화, 신막, 이병기, 허집, 황영일, 유동준, 김영주 등의 이북문화인에게 보내는 메시지 낭독은 남북 적대와 남한체제의 우월성을 승인하게끔 만드는 선전효과가 컸다고 할 수 있다.

적으로 전향할 수 있다는 용의와 태도를 처음으로 민중 앞에 공개<sup>72)</sup>하게끔 함으로써72) 잠재적 불온세력으로서의 전향자라는 사회적, 문화적 표식을 제도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문화영역의 전향은 국민보도연맹이 구사한 색출, 포섭, 전향, 감시, 동원의 메커니즘이 잘 구현된 경우이다. 사상전의 일환으로 기획된 전향제도는 인간의 사상을 개조할 수 있다는(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제로 시행되었다.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를 실현해야 했기 때문에(지식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더 폭력적일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강압적으로 작동시켰을 것이다. 불가능했기에 확실한 사상개조보다는 폭력을 통한 공포의 조성과 일상적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성이 더 중요했다고도 볼 수 있다. 전향의 효과와 영향의 문제인데, 문화영역에서는 생존을 건 내부냉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필자는 전향을 권력에의 굴복이라는 현상적 의미를 넘어 문화주체들의 서로 다른 욕망이 분출하고 경합하는 역동적인 장이었다는 관점에서 그 양상과 의미를 분석한 바 있다(「단정수립 후 전향의 문화사적 연구」 참조).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생략한다. 다만 중요한 특징 몇 가지만 간략하게 거론한다.

첫째, 문화적 내부냉전 구조가 정착되었다. 문화영역에서 전향의 폭풍이 좌익단체에 가담한 전력이 있는 잔류좌익, 중도파 등의 전향(대상)자에게만 적용된 것은 아니다. 철저한 반공이데올로기를 신념으로 한 우익문화인들, 특히 월남문인들은 스스로 반공국민임을 증명해야 했고, 이에 대한 자발적, 능동적 참여를 기회로 삼아 문화적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다. 신변 보장, 문화권력 확보를 둘러싼 치열한 헤게모니투쟁이 전개된 것이다. 좌/우, 중도파/우익의 대결뿐만 아니라 우익문화진영의 분열, 대립을 동반했기 때문에 더욱 격렬할 수밖에 없었다. 냉전반공의 진영논리에 입각한 고발, 비방, 적대, 증오, 동원이 난무한 가운데 그 최종적 승자는 문충이며, 문단으로 볼 때는 청년문학가협회의 주축 멤버(문협정통파)가 관장한 한국문학가협회와 『문예』로 귀결되었다.

둘째, 해방 후 민족문화건설을 목표로 다기하게 모색된 반제반봉건 문화의제가 완전히 붕괴, 좌절되었다. 그것은 진보적 의제의 왜곡, 소거와 더불어 냉전반공에 기초한 애국·구국문화가 주류화 되는 가운데 냉전 진영논리의 극단화 및 남북 체제

72) 조연현, 「해방문단5년의 회고⑤」, 『신천지』, 1950.2, 220면.

경쟁의 도구로 문화가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애국문화(학), 구국문화(학)가 유일한 노선이었다. 특히 친일부역의 의제가 심하게 왜곡되었다. 반미특위가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것으로 왜곡되어 결국 해체되는 흐름과 맞물려 문화영역에서도 거세게 일었던 친일비판 담론이 일시에 사라진다. 더욱이 반공우익세력이 문학 장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방편으로 당시 반민법의 시효가 상실되면서 문학 활동을 재개한 친일문학가들을 보강 자원으로 활용해 세력균형의 역전을 꾀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고,<sup>73)</sup> 실제 그렇게 됨으로써 친일문학가들의 문학적 복권이 이루어진다.

셋째, 문화영역 내부에 상시적 감시체계가 조성되었다. <민족정신양양종합예술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향문화인들은 당국의 검열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위장 전향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과 사상적 전향임을 확실하게 증명하라는 문화계 내부의 요구에 직면했다. 동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그 같은 요구와 강제는 전향문제가 헤게모니투쟁의 도구로 이용되면서 강도가 점점증했다. 국가권력과 문화계 내부의 중층적 감시와 통제가 제도화되면서 감시의 내면화가 강요된 것이다. 한국문학가협회는 전향자들을 모두 포섭해 회원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그들을 주변화, 배제시키는 세련된 전략을 구사했다. 이러한 (비)가시적 감시체계가 변용, 굴절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작동함으로써 냉전분단체제 하 한국문화는 황폐화될 수밖에 없었다. 전향월북자들의 상당수가 적어도 1950년대까지 북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전향이 초래한 문화적 영향력은 남한에서 더 크고 장기 지속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sup>74)</sup> 이와 같은 전향의 문화적 역학은 한국전쟁을 겪으며 또 다른 냉전금제들과 결합해 확대/변용되는 과정을 거친다.

73) 오인환, 「문단의 정리와 보강」, 『주간 애국자』 2호, 1949.10.15, 11면.

74) 제2차 조선작가대회(1956.10)에서 선출된 지도부 명단을 보면 이갑기, 엄홍섭, 조벽안, 조운 등 전향월북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남북문학예술연구회 편, 『전후 북한 문학예술의 미적 토대와 문화적 재편』, 역락, 2018, 29면). 예술영역 전체로 보면 정현웅을 비롯해 그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전향한 뒤 북한체제를 비판하는데 앞장섰던(비록 전시에 재전향의 과정을 거쳤더라도) 월북전향문화인들의 북한에서의 행적을 발굴, 연구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다. 전시 의용군으로 동원된 송지영에 따르면, 김기림, 정지용, 설정식, 정인택, 박노아 김상훈 등 전향 후 보도연맹에 가입했던 문인들이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임화, 김남천, 이원조 등에 의해 핍박을 당했는데, 특히 설정식과 김상훈에게는 『애국자』에 실린 시 때문에 더 가혹했다고 한다(송지영, 「赤流三月」, 오제도 외, 『赤禍三朔九人集』, 국제보도연맹사, 1951, 53~68면).

### 3. 한국전쟁과 반역의 표상, 부역의 서사

반민특위의 해체를 계기로 친일(附日) 의제는 공론의 장에서 거론될 수 없었다. 대신 공산주의 부역(附共)이 반역의 표상으로 대두했으며, 그 영향력은 내면의 통제 로까지 미치기 시작했다. 부공 부역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반역의 단일하고 대표적인 표상으로 정착되었다. 부일 부역에서 부공 부역으로 대체된 것이다. 그것은 법적 차원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한국전쟁 직후 짧은 시간 공존했던(1950.12~51.2) 반민법과 부역법의 교차, 즉 반민법이 폐지됨에 따라 친일파를 단죄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제거되고, 부역법의 제정으로 부역자는 오롯이 북한협력자로 단일화되었던 것이다.<sup>75)</sup> 그것은 이데올로기적 가치가 민족 가치를 압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면죄부를 획득한 부일 부역자들이 소생, 복권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감행할 수 있었고, 부일부역자의 부공 부역자에 대한 공격과 배제가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과 논리가 배태되었다. 최운하(서울시경 사찰과장), 김창룡(SIS, 특무부대장)과 같은 악질 부일 부역자가 부역자심사를 총괄했다는 것이 이를 잘 대변해준다. 친일파가 빨갱이(부공부역자) 단죄의 칼자루를 쥐 형국, 비극이나 그리 낮설지 않은 모습이다. 이해령은 1980년대 한국현대사 인식의 거대한 전환 속에서 부상한 친일파의 짝패가 독립운동가라기보다는 빨치산이었다고 거론한 바 있는데,<sup>76)</sup> 그 짝패는 이때부터 구조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현대사를 반민특위 해체 전후로 크게 나눌 수 있다는 리영희의 통절한 지적이 상기되는 대목이다.

한국전쟁기 부역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서울수복 직후이다. 한국전쟁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북한 점령지에서 부공 부역자가 대거 양산되었고, 서울수복을 계기로 부공 부역자 색출과 처벌의 요구가 비등해지는 동시에 부역자 처리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었다. 사회 모든 부분에서 감정적 보복, 밀고, 조작과 학살이 무차별적으로 자행되었다.<sup>77)</sup> 도강파와 비도강파(잔류파)의 이분법적

75) 김지형, 「한국전쟁기 부역 이데올로기의 전환: 부일과 부공의 교차점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17-1, 전남대 5.18연구소, 2017, 89~95면.

76) 이해령, 「빨치산과 친일파-어떤 역사 형상의 종언과 미래에 대하여」, 『대동문화연구』 10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7.

77) 염상섭의 「해방의 아침」(『신천지』, 1951.1, 98~107면)에 잘 나타나 있다. 태극기를 제일 먼저 게양해 부역행위를 은폐하려 하고, 감정적 밀고로 빨갱이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우익청년단이

분류법이 가동되고 그에 따른 도강파(애국자)/잔류파(부역혐의자)의 인식이 유포, 확산되면서 적대와 증오의 심리에 기초한 사회갈등이 극에 달했다. 이런 배경에서 ‘부역 행위특별처리법’(이하 ‘부역법’)이 긴급하게 제정되었다(1950.12.1). 부역법 제정 이전에도 한국전쟁 발발과 동시에 대통령 긴급명령 제1호로 공포된 ‘비상사태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이하 ‘특조령’)에 의거한 부역자처벌이 이루어졌다. 특조령은 단심제에다 증거 설명도 생략한 채 사소한 범죄도 중형을 부과할 수 있는 가혹한 처벌 규정으로 채워져 있었다. 특조령을 제정한 목적은 공포·처벌을 통한 질서 유지와 처벌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데 있었으며, 그것은 전쟁초기 패전과 서울을 유기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sup>78)</sup> 부역기준의 모호성과 법의 자의적 적용에 따른 부역자의 양산과 극단적 처벌에 따른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부역법이 제정된 것이다. 부역법은 단순부역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과 자수한 경우는 감형 또는 면제가 가능했고 단심제의 한계에서 벗어났다. 당시 관계당국이 파악한 부역자 수는 최종적으로 550,915명으로 집계되었는데,<sup>79)</sup> 이들을 모두 처벌할 수도 없었고, 처벌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태부족이었기 때문에 관대한 조치가 불가피했다. 또한 ‘홍제리의 처형언덕’, 즉 부역자 집단학살이 세계적 이슈로 부각되고 미소 간 심리전의 재료로 활용된 것도 정권으로서의 큰 부담이었다.<sup>80)</sup> 일부에서는 특조령, 부역법이 아니더라도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으로 악질부역자를 처단할 수 있다며 부역법, 시민증 대신 자수기간과 보도연맹을 부활시키는 것이 오히려 복수주의적 부역법보다 더 도의적이며 민족정기를 바로잡는 첩경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sup>81)</sup>

---

부역자를 색출해 즉결처분을 내리고, 상호 의심의 횡행과 공포분위기가 극도에 달하는 등 당시 부역자 처벌을 둘러싼 혼란상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딸이 이웃을 위원장이었다고 고발해 체포를 당하게 만든 것을 두고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안타까움에 대한 딸의 편견, 즉 “온 별 걱정을 다하십니다. 그럼 저의를 살려주구 우리가 대신 죽어두 좋을까요”(107면)에서 당시 부역자처리에 대응한 평범한 사람들의 심성을 엿볼 수 있다.

78) 김학재, 「한국전쟁기 대통령 긴급명령과 예외상태의 법제화」, 『사회와 역사』 91, 한국사회사학회, 2011, 237~241면.

79) 박원순, 앞의 1990 글, 185면.

80) 이에 대해서는 이임하, 「한국전쟁기 부역자 처벌」, 『사림』 36, 수선사학회, 2010, 103~113면 참조.

81) 김삼규, 「평양과 함흥」, 『동아일보』, 1950.11.21. 서울시는 1950년 10월 20일부터 시민들의 신분보장, 치안유지, 제5열 소탕의 명목으로 만 14세 이상의 남녀에게 시민증을 발급했는데, 사상불순자에

부역자 검거와 심사는 군·검·경 합동수사본부(1950.10.4 발족/1951.5 해체)에서 주도했다. 단기간에 부역자를 처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조직된 합동수사본부는 김창룡과 오제도가 지휘했는데, 오제도는 처단 대상으로 ‘6·25전에 남북로당에서 지하운동을 하다가 부역한 자, 형무소에서 나와 부역한 자, 보도연맹에서 불순분자라고 규정받았던 자로서 부역한 자, 중간파로서 대한민국에 이롭지 못하였던 자가 부역한 자, 북한에서 공작대로 내려온 자’로 예시했다(『서울신문』, 1950.11.27). 부역자 선정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었으나 당시 합동수사본부가 다른 부역자 약 2만 명의 심사과정에서 적용된 세부적 기준은 대체로 세 등급, 즉 공산측에 적극 가담하여 악질적 행위를 한 자는(A급) 군법회의 회부,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없이 부역한 자는(C급) 전원 석방, 그 중간은(B급) 검찰로 송치하는 조치가 시행되었고, C급 1만3천 명이 석방됐다. 오제도에 따르면 합동수사본부의 부역자심사에서 최대 난관은 잔류파에 속한 국회의원, 의사, 교수, 문화인 등 사회지도층의 부역 심사였고, 이는 합동수사본부가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여서 이승만에게 불문에 붙이는 관대한 처분을 건의했고 재가 받았다고 한다.<sup>82)</sup> 상당한 규모였던 잔류파문화인들의 부역 혐의가 면죄된 저간의 사정을 알려준다.

문화인들의 부역심사는 합동수사본부뿐만 아니라 자체 심사위원회에서도 이루어졌다. 학계, 문학예술계 등 각 분야별로 자체 부역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가 시행되었는데, 도강파에 의해 주도된 심사였기에 도강파/잔류파의 갈등과 격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특이한 것은 문학에서는 모윤숙, 조연현 등 잔류파가 부역자심사를 주도했다는 점이다. 잔류했으되, 부역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작용한 듯하다. 사실상 자체 심사대상자가 많지는 않았다. 부역자는 많았으나 대다수가 월북했고 부역혐의가 무거운 사람들은 군·검·경의 심사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가령 노천명과 조경희는 국방경비법(제32조) 위반으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사형을 구형받았다(10년형 선고). 공소내용을 보면, 노천명은 문학가동맹에 자진가입, 유세대에 참여하여 적극 협력, 적에게 여학사규약 명부 제공이, 조경희는 문학가동맹에 자진가입, YMCA에

---

게는 교부를 거절해 논란이 일어났다. 석방된 부역자에게도 임시시민증을 발급했으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82) 오제도, 「부역자 처리」, 『동아일보』, 1976.6.28. 백철의 회고에 따르면 자신과 최정희 등이 합동수사본부에 자수형식으로 출두해 오제도에게 심사를 받았는데, 보도연맹원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했다고 한다(백철, 앞의 1975 책, 439면).

서 열린 문화인총궐기대회에 참가, 유세대에 참석해 의용군 출전을 장려하는 시 낭독 등이 각각 적시되어 있고, 조경희는 사회주의자 남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서대문 형무소에 구금되었다(『동아일보』, 1950.10.29.).

그런데 잔류했거나 부역 혐의가 의심되거나 부역자로 입증된 문(화)인들은 동원이든 자발적이든 간에 자신의 체험을 고백, 참회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래야만 신분이 보장되었고 문필활동을 통한 생계유지가 가능했다. 군에 입대하거나 종군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선호되었지만, 그것도 대부분 고백, 참회의 기록을 남긴 뒤에 가능했다. 변명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일반부역자들에 비하면 문화인에게 제공된 특혜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로 이른바 체험수기가 촉출한다. 동원의 형태로 발간된 대표적인 체험수기가 『적화삼삭구인집』(국제보도연맹, 1951.4)이다. 오제도가 기획한 이 수기집은 합동수사본부에서 부역심사를 받았던 문인들의 수기를 집성한 것이다. 관대한 처분의 대가였는지도 모른다. 수기집에 실린 9편의 체험기는 각자의 체험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타의적으로)부역한 사실에 대한 고백·변명·반성, 공산주의 체험(“생지옥”)의 내용, 적의 만행과 적대감 표출, 대한민국체제의 우월성 제시, 국가에 대한 충성 맹세 등의 정형화된 서사구조를 지니고 있다. 관대한 부역자처리를 통한 대한민국의 체제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한 기획의 소산이다.<sup>83)</sup> 그것은 오제도의 글에서 명백히 밝혀져 있다. 부득이하게 부역한 문화인에게 허물을 돌릴 수 없고, 함께 도강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문화인을 재생시키고자 관대한 처분을 내렸으니 자진 분발하여 타공전선 강화를 위해 일민주의민족문학 수립과 보급에 전력해야 함을 권고한다. 동시에 공포와 회의에 사로잡혀 우물쭈물하는 태도에 경고를 내리고 있다. 관용, 포섭, 엄벌의 부역자 처리를 선전하고 대공전선의 강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이 뚜렷하다. 이 수기집은 전후에도 대공 선전자료로 재활용되었다.<sup>84)</sup>

83) 그것은 이 수기집의 편집체계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맨 앞과 뒤에는 김용환의 팽플릿에 가까운 만화(적지 하의 90일간)(제목; 예술의 빈약, 약탈, 변화 없는 정강연설, 강제선거, 모순된 자유, 공포정치/인류의 적, 赤魔의 말로, 기아, 모략선전, 살인마)가 배치되어 있고, 김창룡의 '타공구국'회호, 부역자 양주동, 백철, 최정희, 송지영, 장덕조, 박계주, 손소희, 김용호의 수기, 오제도의 글이 순서대로 실려 있다. 판권란에는 국방부정훈국부산분실검열필이 첨부되었다. 체계상의 특징과 오제도의 글이 포함됨으로써 선전용이라는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며, 이 같은 편집체계로 인해 각 수기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프로파간다로 의미화 된다.

민간에서 출간된 체험수기단행본, 잡지의 수기기획도 동원된 산물이 아니라 할 지라도 체제우월성을 선전하고 대공전선 강화를 독려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다. 가혹한 전시 군검열로 인해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수밖에 없었다. 『고난의 90일』(수도문화사, 1950.11; 유진오, 모운숙, 이진호, 구철회),<sup>85)</sup> 『나는 이렇게 살았다』(을유문화사, 1951; 채대식, 복혜숙, 손기정, 이창수, 황신덕, 민규식, 박순천, 장후영, 김인영, 계광순, 김영상, 엄상섭), <암흑의 3개월> 기획(『신천지』, 1951.1; 고희동, 황신덕, 김광주, 조연현, 우승규, 김동명) 등이 대표적이다. 도피와 부역의 엄격한 구별짓기와 적극적 부역행위(자)에 대한 적개심 표출로 방어적/공격적 인정투쟁을 전개하는 특징이 두드러지며, 참회와 반성을 거쳐 충성을 맹세하는 것은 공통적이다. 특히 북한군지원입대(의용군) 부역사실에 대한 강도 높은 취조를 받았던 인사들(박계주, 김용호, 황신덕, 송지영 등)<sup>86)</sup>의 수기에는 북한 체류의 상세한 체험 및 탈출의 극화와 함께 맹목적인 적대감을 극단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반탁 및 전향경력 때문에 더 꺾박을 당한 사연, 정부의 무책임과 도강파에 대한 원망을 표현한 대목은 이색적이다. 이 모든 것의 저변과 중심에는 ‘생지옥’으로 부조된 북한의 만행에 대한 다양하고도 짙진한 재현이 놓여 있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체험수기들이 자유세계로 전파, 확산되어 냉전 심리전의 자료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이다. 최근 옥창준의 연구에 의해 『고난의 90일』과 『나는 이렇게 살았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번역·발췌하여 새롭게 구성한 『The Reds Take a City』(릿저스대학교출판부, 1951.7)가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탈리아어판, 홍콩어

84) 『적화삼삭구인집(Ⅱ)』(『북한』 7, 1972.7; 송지영, 장덕조, 박계주의 수기 재수록), 『적화삼삭』(『북한』 8, 1972.8; 김용호, 손소희, 오제도의 글 재수록), 『내가 체험한 지옥의 적치』(반공지식총서2, 희망출판사, 1971; 최정희, 박계주 수기 재수록, 김팔봉, 김기완, 장의숙, 신카나리아).

85) 『고난의 90일』도 비슷한 편집체계를 보여주는데, 머리말에서 책의 출간 목적이 “멸공 성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라고 명시했다. 6·25는 북한의 민족적 죄과이고 따라서 적색의 말살이 화급한 과업인데, 긴장이 해이됨에 따라 또 다시 저들에게 준동의 기회를 줄 우려와 적비의 광태를 경험하지 못한 동포들 중에 아직도 무모한 사상에 사로잡힌 자가 남아있으리라 염려가 되어 발행했다고 출간 배경을 상술한 것으로 보아, 대민 선무공작의 심리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방부정훈국보도와 검열필이 첨부되어 있고, 도강파인 유진오의 체험기가 포함된 점이 이색적이다. 전시 문화인 30명을 동원해 출간한 『전시문화독본』(김송 편, 계몽사, 1951.3)도 중학생 이상 학도들의 교재용으로 기획된 것으로 선무공작용 자료로서의 역할을 했다.

86) 박계주, 「스타린 총독부 파티 참렬기」, 『동아일보』, 1951.6.25~7.23.

판, 스페인어판, 포르투갈어판)되어 지구적 냉전의 차원에서 전파·수용되었으며, 동시에 그 영역본이 만화 『동순이와 순취』로 변주되어 국내로 귀환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sup>87)</sup> 물론 당시에도 『The Reds Take a City』의 발간소식이 국내에도 알려졌고, 한국전쟁의 참상이 외국 민간에 전파된 것에 고무되어 미대사관, 문충, 출판협회의 발간 공동축하연이 두 차례 열린 바 있다. 그러나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자유세계적 차원으로 전파되고 귀환(재수용)되었다는 것은 최초의 발견이다. 한국전쟁 내지 공산주의체험 수기들이 냉전텍스트로서 갖는 세계적 의미를 탐구하는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기실 냉전을 열전으로 경험한 한국전쟁체험 수기는 미국 민간재단이 일찍부터 주목했다. 아시아재단이 해방 후 북한 경험, 소련, 중국 등 공산국가의 체험, 한국전쟁 직접 체험 등 공산주의 체험기를 선별해 미국 및 아시아지역에 전파하려는 번역 사업에 큰 관심을 기울였고, 원조를 통해 번역 사업이 일부 실행되었다. 그래서 전시 월남자(문화인)들이 가장 매력적인 대상이 되었다. Marguerite Higgins의 『War in Korea』(1951)의 한국어 번역 수용(윤영춘 역, 『한국은 세계의 잠을 깨웠다-한국중군기』, 삼협문화사, 1951) 양상과 교차시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전쟁 체험수기들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그 자체보다도 수기들이 사회대중적으로 수용되면서 야기한 효과에 있다. 증언, 체험수기들은 공산주의(북한)의 만행을 부각해 그려냄으로써 공포와 적의를 고취시켜 반공을 내면화하는데 기여했으며, 그러한 공포의 효과를 지속시키는 원천이었다.<sup>88)</sup> 특히 부역자들의 체험 수기는 당시 부역자처벌과 학살의 광풍 속에 일상적으로 만연된 공포분위기를 예리하게 환기시켜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담론 효과를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sup>89)</sup> 체험에 근거한 반공담론이 전쟁, 분단, 냉전의 공적 기억을 강화, 재생산하는 과정의 중심에 부역서사가 놓여 있다.

87) 옥창준·김민환, 「사상심리전의 텍스트로서 한국전쟁-자유세계로의 확산과 동아시아적 귀환」, 『역사비평』 118, 역사비평사, 2017.

88) 신형기, 「6·25와 이야기 경험-전쟁수기들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31, 상허학회, 2011 참조.

89) 당시 부역자처벌의 공포는 북한 수복지구에게까지 미쳤다. 부역법이 북한에 적용되어 모조리 학살될 것이라는 공포가 팽배했으며, 그것이 해방직후 해외파가 국내파들에게 친일파가 아니어도 민족반역자로 취급했던 경험에 의해 증폭되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인플레이션이 이북에 침투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생활의 파탄에 대한 공포도 이에 못지않게 컸다고 한다. 김삼규, 「평양과 함흥」, 『동아일보』, 1950.11.5~21.

이렇듯 한국전쟁기 부역 또는 부역자 처벌은 한국사회의 공포, 원한과 보복이라는 사회질서를 만들어내고, 부역이 원죄가 되어 증오와 적대에 기초한 국민과 비국민이라는 경계 짓기를 생산해내는 기제가 된다.<sup>90)</sup> 이러한 부역의 효과는 전시 문학 장에서 현저했다. 문단의 부역심사와 부역자처벌은 다른 분야에 비해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으나 문단질서 재편의 중요한 뇌관으로 작동했다. 일찌감치 자체 민족반역프레임을 가동해 냉전적 적대를 생산해냈다. 문총구국대는 전쟁발발 직후 조국을 배반하고 민족정기를 더럽히는 반역문화인을 조사하기 위한 최고집행위원회를 개최해 심의과정을 거친 뒤 총 139명의 제1차 반역문화인명부를 실명으로 공개했다(1950.8.10.). 임화, 한설야, 이태준 등 남하한 월북자와 잔류파, 부역자 등이 망라되어 있다. 이 같은 반역자명부는 홍명희, 이극로, 이기영, 한설야, 임화 등 총 27명을 중요전범자로 결정, 공개하는 것으로(『부산일보』, 1950.8.19), 또 서울수복 후 전시 문인들의 변모된 동향을 정리해 발표하는 것으로<sup>91)</sup> 이어지면서 증오와 적대를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월북 후 한국전쟁에 종군, 남하했던 전범자, 자진월북자, 부역자들은 민족을 반역한 탕아로 규정되어 주 공격대상이 된다. 가족들의 신변을 위협하면서까지 전과를 누우치고 투항할 것을 권고하거나,<sup>92)</sup> 부역문화인을 레닌 스탈린의 후예로 규정하고 참회의 기록을 남기고 속죄의 삶을 살아가야 하되 절대 포용할 수 없으며,<sup>93)</sup> 부역 후 월북한 문화인들을 매소부로 규정하고 다시는 민족으로 받아들

90) 이임하, 앞의 2010 글, 137~138면.

91) 「문단은 다시 움직인다」, 『문예』(전시판), 1950.12.5. 이 명단은 비교적 사실에 입각해 작성되었다. 괴뢰군에게 피살된 문인(이해문), 괴뢰군에게 납치된 문인(이광수, 정지용, 김기림, 김진섭, 김을운, 홍구범, 공중인, 최영수, 김동환, 박영희, 김억, 이종산, 김성림, 조진홍), 전상사망자(김영랑), 괴뢰군과 함께 자진복행한 자(박태원, 이병철, 이용악, 설정식, 김상훈, 정인택, 채정근, 임서하, 김병욱, 송완순, 이시우, 박은용), 괴뢰군과 함께 수도를 침범했던 자(이태준, 이원조, 안회남, 김동석, 김사랑, 이동규, 임화, 김남천, 오장환, 배호), 북행했다가 귀환한 자(박계주, 박영준, 김용호), 부역嫌疑로 수감 중에 있는 자(홍효민, 전홍준, 노천명, 이인수), 괴뢰군 치하에 완전히 지하 잠복했던 문인(박종화, 모운숙, 오종식, 유치환, 이하운, 장만영, 김동리, 조연현, 최인욱, 유동준, 김광주, 최태웅, 박두진, 강신재, 방기환, 설창수, 임옥인, 한무숙), 괴뢰군 침공시 남하했던 문인(김광섭, 이현구, 오상순, 서정주, 조지훈, 박목월, 구상, 이한직, 조영암, 김윤성, 김송, 서정태, 임궁재, 이원섭, 박용구, 김말봉). 반역자라는 지칭은 없으나 ‘문인’과 달리 자진월북자, 부역자 등 ‘자’로 지칭된 부류는 내부적으로 반역자라는 의심과 참회를 요구 받았다.

92) 「반역문화인에게 보내는 경고문」, 『전선문학』(『문학』전시판), 1950.9, 49~50면.

93) 조영암, 「잔류한 부역문화인에게-보도연맹의 재판을 경고한다」, 『문예』(전시판), 1950.12, 74~75

일 수 없다고 천명한다.<sup>94)</sup> 감정적 증오가 노골적, 극단적이다. 바로 이것이 민족반역 프레임의 기반이었고 이 프레임에 의해 증오와 적대가 확장되는 구조 속에서 문화계 내부냉전이 심화되는 것이다. 문화계 내부의 문화빨치산 색출작업은 그 일환이다.<sup>95)</sup>

문화계가 독자적으로 ‘월북자 및 부역자=반역자’라는 민족반역프레임을 만들어 극단적 내부냉전을 공세적으로 전개한 배경에는 전시 국책에 공명, 협조한 결과이기도 했으나, 이보다는 문화계에 복잡한 사정이 작용한 산물로 볼 수 있다. 이념전의 성격을 지닌 한국전쟁으로 인해 사상문제가 생사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면서 대다수 문화인은 이전의 좌익 활동 전력, 전향 전력, 부역 전력, 월남 전력(특히 1·4후퇴 때 월남자의 북한에서의 활동) 등으로 인해 다시금 엄중한 사상검증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게 된다. 전향경력자와 부역자는 보복에 대한 공포로 다수가 월북을 택하지만, 남한에 잔존한 해당자들은 반공적 선민의식에 입각한 반공반북의 전사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여 대내외적인 인정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사상검증에 비교적 자유로운 경우에도 크게 예외가 아니었다. 문화 권력에 대한 욕망이 이를 더욱 자극했기 때문이다. 전시에 또 냉전분단체제에서 문화 권력을 (재)생산, 공고화 하는데 사상전만큼 강력하고 효율적인 무기는 없었다.

문화계 내부냉전과 관련해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부공 부역과 부일 부역이 결합된 반역프레임이 작동했다는 사실이다. 즉 부일 부역에서 자유로운 김동리, 조연현 등 일부의 문화권력자들이 상당수의 부공 부역자가 부일 부역자였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부일 부역과 부공 부역의 연속성을 강조한 민족반역프레임을 가동한 것이다. 부일과 부공이 민족반역이란 차원에서 의미적 동질성으로 변용되면서 민족 윤리에 입각한 적대, 배제가 극대화된다. 친일 및 일본 귀화와 한국전쟁 참입 종군을 감행한 장혁주가 민족반역의 대표적인 표적으로 집중 공격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부일과 부역의 교차로만 보기 어려운 문화계 내부냉전의 복잡한 갈등 구조를 말해준다. 그것은 단선단정국면에서 좌익, 중간파를 공격하는 논리로 등장한 뒤 전향국면과 전쟁 부역의 홍역을 거치며 표면화되었다. 이는 문화제도권을 장악한 민족문화 진영이 본격적

---

면. 부제 ‘보도연맹의 재판을 경고한다’는 의미는 부역문인들에게 재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94) 김광주, 「북쪽으로 다라난 문화인에게」, 『문예』(전시판), 1950.12, 76~78면.

95) 「문화빨치산 준동도 경계」, 『경향신문』, 1953.7.5.

으로 분열되기 시작하는 징후로서 이후 부일/부공 부역을 둘러싼 문화계 내부의 치열한 내부갈등으로 치닫는다. 그것은 예술원파동을 계기로 폭발한다. 요컨대 한국전쟁을 계기로 좌익, 전향, 부역, 월북(남) 등의 냉전 금기들이 종합적으로 재구성된 민족반역프레임이 구조, 구축되면서 국가폭력을 능가하는, 어느 면에서는 그보다 더 집요한 규율장치로 굳어져 된 것이다. 그것은 이후 다양한 변용과 재생을 거듭하면서 적어도 1980년대까지 유의미한 장기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했다.

### Ⅲ. 프로파간다와 疑似합의적 냉전mentality의 정착

냉전금제는 프로파간다를 통해 침투, 부식된다. 해방직후 한국사회가 이념의 각축장이 되면서 서로 다른 정파적 주의주장이 가두선전(대중집회, 시위, 포스터, 삐라 등), 슬로건선전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파간다가 헤게모니투쟁의 도구로 구사되었다. 때 이른 냉전구조가 정착되면서 프로파간다의 중요성을 증대시켰고, 또 그 필요와 의의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남북분단이 제도화되고 세계냉전이 점차 격화되면서 세계냉전체제의 최전선으로서의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강조됨에 따라 한반도는 선전전(Propaganda War)의 전장으로 비화되기에 이른다. 그것은 미국과 소련의 선전전 그리고 양국 선전전의 전략적 목표의 직접적인 영향 속에 있었던 한국과 북한의 선전전이 중첩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미국과 한국의 선전전은 공산주의와의 대결이라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했으나 주체, 범위, 방법 등 세부적인 지점에서는 상호 이해관계의 불일치로 크고 작은 갈등을 빚었다.

미국의 對韓선전정책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세계전략에 의해 좌우되었다. 이러한 전략적 목표에 따라 시행한 미국의 대한선전은 우선 반공선전을 공고히 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대내·외적으로 정통성, 정당성을 의심받고 있던 이승만 정부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했다. 자유진영국가들의 반대를 사전에 조정해내면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유엔 결의를 이끌어낸 것도, 제주 4·3사건, 여순사건의 토벌작전에 무력적인 개입뿐만 아니라 삐라의 대량 살포와 같은 한국군의 대민 선무공작을 지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정부수립 후 유엔한국위원단이 연이은 반란으로 인한 한국의

불안정한 치안상태, 사회혼란상과 민심의 동향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이승만 정부가 한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이승만 정부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도 마찬가지로 맥락이다. 중국의 공산화 직후 미국이 대규모의 대한 군사 및 경제 원조를 시행하기 시작한 것도 공산주의의 위협이 점증한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원조전(경제전)은 냉전전쟁의 중요한 일환이자 그 동력이다. 이러한 기조는 38선충돌이 잇따르면서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을 계기로 강화되며 한국의 보호를 넘어 북한을 상대로 한 공격적인 선전전으로 확대되었다.

다른 한편 미국의 대한 선전정책은 미국적 이념과 가치를 부식하는데도 주안점을 두었다. 주로 교육과 문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미국은 미국 점령지역에 교육과 문화를 매개로 미국의 이익을 방해하는 소련의 정책과 반미 선전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의 가치와 서구의 생활양식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선전과 공보에 역점을 두었다. 국무부의 정보교환프로그램이 이를 대표하는데, 미국은 정보와 교육의 교환정책을 공산주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심리전의 강력한 무기로 인식했고, 한국도 지정학적 위치와 취약한 정부 때문에 소련의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간주되어 적극적인 정보교환정책이 시행되었다.<sup>96)</sup> 한국에서는 국무부소속의 주한미국공보원이 거점기관이었다. 미국공보원은 미국문화연구소(OCI)를 설치하고(1948.4.29) 한미문화 교류와 다방면의 계몽선전 활동을 전개했다. 당시 문화, 학술과 관련한 거의 모든 행사는 미국문화연구소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여순사건의 보고대회, 사진전 등도 미국문화연구소의 지원 속에 이루어졌다. 『문예』의 창간도 미공보원의 원조에 의해 가능했다. 미국공보원이 USIS로 개편된(1949.7) 뒤 미국대사관과 공조 하에 선전활동이 좀 더 체계적으로 전개되는데, 초대 공보원장 스티 워드는 국제공산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미공보원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것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오늘날 인간정신을 위축시키는 최대의 선동자가 국제공산주의이며, 공산주의의 교리는 부조리, 사악하여 인간정신의 발전을 저해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또 공산주의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문화를 통한 인간정신의 능동적 발현, 발전이 중요한데, 그 방법으로 미국의 신념,

96) 장영민, 「정부수립 이후(1948~1950) 미국의 선전정책」, 『한국근현대사연구』 31, 한국근현대사학회, 2004, 279~282면.

견지(특히 존 듀이의 사상)에서 배울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sup>97)</sup> 미공보원이 자신들의 입장을 잘 드러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꽤 파격적이다. 미공보원의 목표가 선전전에 있었음을 시사해준다. 이는 미공보원의 문화 사업이 단순히 미국문화, 미국적 가치를 전파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산주의와의 대결을 목표로 한 미국 해외선전정책과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었다. 미공보원의 선전정책은 미국대사관 문정관으로 재직하면서 한국 내 선전사업을 책임지고 있던 제임스 스튜어트가 원장으로 부임하면서 공산주의와의 (전략)심리전에 초점을 맞춘 반공선전활동이 전개되었고, 그것은 한국전쟁 초기 미공보원이 유일하게 체계적인 심리전을 주도하며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성공적인 선무작전 전개로 이어졌다.<sup>98)</sup>

한국정부의 선전 정책은 대내·외적인 사상전의 긴급성이 강조되는 객관적 정세에 따라 적극성을 띄게 된다. 특히 이승만 정권의 취약성, 불안정성은 프로파간다의 필요성을 배가시켰다. 또한 제주 4·3사건, 여순사건, 38선 충돌 등으로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검거와 투옥으로만 적의 사상공세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사상통일 운동에 근거한 강력한 선전전이 요구되었다.<sup>99)</sup> 그러나 일원화된 선전기구를 갖추지 못했고, 따라서 선전의 목표, 전략이 부재했다. 선전전의 토대가 되는 국가정보조직도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았다. 여순사건을 거치며 비로소 조직이 마련될 수 있었다. 당시 최대 정보조직이던 육군본부정보국은 방첩과와 첩보과를 중심으로 군, 민간을 포괄한 정보활동을 통해 이적분자 수사, 대북공작, 심리전 활동을 전개했으나 여순사건을 계기로 군내 좌익세력을 제거하고 숙군사업에 주력했다. 국방부 또한 OSS경험이 있는 이범석이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4국을 설치해 북한동향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고 국내 적색분자를 적발하는 공작을 전개했으나 예산 부족과 미군의 지원을 받지 못해 뚜렷한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sup>100)</sup>

97) 스티 워드, 「교육과 문화」(특별기고), 『문예』, 1949.12, 149~151면. 흥미로운 것은 당대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공자(유교)에 있다며 존 듀이의 사상과 대비시켜 비판하고 있는 점이다.

98) 한국전쟁 초기 제임스 스튜어트의 심리전 활동상에 대해서는 장영민, 「한국전쟁 전반기 미군의 심리전에 관한 고찰」, 『군사』 5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224~225면 참조.

99) 「사상통일운동의 필요성」(사설), 『동아일보』, 1949.9.26.

100) 정규진, 『한국정보조직』, 한울, 2013, 249~266면. 당시 육군정보국의 심리전 전속요원으로 활약했던 구상에 따르면, 육군정보국이 문충에 심리전요원을 특정해와 구상, 최태웅, 조영암 등 월남작가들이 천거되었으며, 구상은 정보국제2과(HID) 모략선전실에서 북한의 진상을 폭로하는 『북한특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선전기구는 공보처 산하에 조직된 ‘선전대책중앙위원회’(1948.11.30, 위원장 이범석)가 처음이다. 이 위원회는 여순사건에서 나타난 민중들의 동요를 진정시키고 거족적인 애국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전국적인 규모로 만들어진 선전조직이다. 이 위원회의 선전사업을 대표하는 것이 여순사건 1주년을 기해 선전(지방)계몽대 파견이다. 총 216명을 동원하여 민족정신양양을 목표로 정부시책을 선전하고 민심을 계발하기 위해 전국 8개도에 계몽대를 파견했다.<sup>101)</sup> 연극대, 영화대로 편성된 지방계몽대는 박종화, 오종식 등 문화인, 언론인, 정부 관리들이 총망라된 관민협동 선전사업이었다. 이후 선전대책중앙위원회 차원의 민심수습용 선무사업이 지속된다. 건국이념선양 포스터 모집, 국민가요 모집, 이동사진전시회, 반공방첩주간 운영 등 반공사상을 전파, 진작시키는 선전사업도 꾸준히 전개했다. 그 과정에서 문충과 공동주최로 ‘3.1절 경축예술제전’ 개최(1950.3.1)와 같이 문화인의 동원과 자발적 참여가 결합된 행사가 많았다. 특이한 것은 당시 선전활동이 주로 ‘강연영화회’ 형태로 개최된다는 점이다. 여순사건 반란지구위문단(종교계 대표단 주최)의 강연영화회를 비롯해 각종 계몽선전사업의 주종을 이룬다. 대중들의 리터러시 수준과 영화의 장르적 특성을 심분 고려한 것으로 반공사상의 부식, 침투에 용이했을 것이다. 물론 강연영화회 형식의 선전은 방공사상보급 강연영화회(1933.5.5.), 방공사상보급선전 강연영화회(1939.7.9) 등 식민지시기 방공사상의 계몽, 선전의 유력한 수단으로 널리 보급되어 시행된 바 있다. 학습효과와 재생산인 셈이다.

이처럼 국가 차원의 선전사업이 축성된 것은 여순사건을 통해서였다. 선전의 주무부처인 공보처는 여순사건 이후 공산주의를 비난하는 반공선전팸플릿을 발간하기 시작했다. 여순사건을 다룬 『반란의 진상과 공산당』을 비롯하여 『반공산당 치하의 중국』(1949), 『북한 괴뢰집단의 정체』(1949), 『이북 공산도당 화폐개혁의 진상』(1949), 『소련군정의 시말』(1949) 등의 팸플릿은 제목에 시사되어 있듯이 주로 공산주의를 비난, 비판하는 내용이었다.<sup>102)</sup> 이와 같이 반공사상을 기조로 하는 프로파간

---

보』 책임편집과 북한으로 비밀리 보냈던 지하신문 『烽火』를 제작했고, 제3과(CIC)에서 북한방송 청취록을 분석하는 임무를 수행했는데, 그것이 한국전쟁기에도 이어져 정훈국 소속으로 대적전단 제작과 선무심리전용 『승리』(서울수복 후 국방부기관지 『승리일보』로 발전)를 편집 제작했다고 한다. 구상, 「그때 그 일들 219」, 『동아일보』, 1976.9.22~23.

101) 「민족정신 양양하자」, 『동아일보』, 1949.10.23.

102) 김득중, 앞의 2009 책, 532면.

다는 대북선전에도 구사된다. 문화인의 참여가 눈에 띄는데, 예컨대 이현구는 이북동포들에게 ‘우리는 조선사람’이라는 민족정기를 강조하며 소련식 사회주의의 감옥속에서 자유와 조국을 찾으려는 제2의 해방운동, 조국통일과 민족재생의 내일을 위한 일대 저항운동을 전개할 것을 촉구했다.<sup>103)</sup> 마찬가지로 김광섭은 반탁에서 총선거에 이르는 과정을 3.1운동의 정신적 계승으로 평가하고 한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국토의 침략자와 반역의 무리(북한정권)를 처단하는 강렬한 민족의 정신이 북에서 발현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북동포들의 저항운동을 자극했다.<sup>104)</sup> 민족주의(일민주의)에 기초한 체제우월성을 선전하는 대북(전략)심리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전향국민의 종합예술제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전향문화인들의 이북문화인에게 보내는 메시지 낭독도 대북(전략)심리전의 효과를 창출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북(전략)심리전은 이승만의 대북방송에서 절정을 보인다. 이승만은 1950년 5월 6일 중앙방송국을 통해서 장문의 ‘이북동포에게 고하는 대북특별방송’을 하였다. 골자는 ‘이북동포의 情形 통분을不禁’, ‘북별은 가능, 먼저 회개하라’, ‘회개하면 김일성도 포섭, 포용’, ‘소련위성국화의 결과는 노예뿐’ 등 소재목의 통해서 넉넉히 기뻐할 수 있다.<sup>105)</sup> 38선을 침범하며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은 동족이 아니며 인류로 인정할 수 없고, 북별이 가능하나 민족상쟁의 유혈을 피하고 유엔, 미국과의 협조관계에 따른 국제주의노선을 준수하기 위해 당장은 감행하지 않을 것이며, 전비에 대한 회개를 통해 남북통일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과거의 잘못을 자수 회개하여 보도연맹에 가입해서 전향한 사람들이 수만 명에 달한다는 것을 예로 들며 남북을 아우른 전비 회개와 일민주의 대단합이 통일의 지름길임을 밝힌다. 회개, 귀화해 민주국가의 토대를 세우는데 이바지한 동포들에게는 김일성 이하 모든 반역분자들을 소탕한 뒤 상당한 지위, 기회를 제공하고 표창할 것이며, 김일성, 박헌영 일파가 획책하는 매국적 소련위성국화는 후손들에게 노예적 삶을 물려주는 것으로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천명하고 있다. 라디오매체를 통한 전략심리전의 본보기이다. 라디오는 신속하고 광범한 지역에 비교적 싼 값으로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심리전 매체이다. 라디오 보급률과 전파방해 수준에 따라 효과가

103) 이현구, 「이북동포에게 보내는 글월」, 『동아일보』, 1949.1.4.

104) 김광섭, 「이북동포에게 보내는 글월」, 『동아일보』, 1949.1.1.

105) 전문은 『경향신문』 1950년 5월 7일자에 실려 있다.

좌우되는 한계가 있으나 당시 문맹률의 정도를 감안할 때 문자매체보다 선전 효과가 컸다. 한국전쟁 전에는 남북 모두 팸플릿 살포와 같은 전술 심리전보다는 라디오를 이용한 전략 심리전에 치중했다. 북한은 한국전쟁 직전 전쟁계획을 위장하기 위해 라디오를 통한 선전전을 강화했다. 라디오평양을 통해서 한반도 전역에 걸친 총선거 실시를 요구하는 방송을 했고, 연합군과 남한의 정당에 38선 회담을 제안하는 방송을 했다. 유엔한국위원단은 남북 상호간 악질 선전공세로 인해 한국문제 해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적시한 바 있다.

프로파간다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국내 최초로 선전전의 이론과 체계를 정립한 이론서가 발간된다. 김종문의 『선전전의 이론과 실제』(1949.12)이다. 여순사건에 순천지구민사지도부장으로, 지리산공비토벌의 제3연대 부연대장으로 참여한 실전 경험(선무공작)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 전개되었던 선전전 관련 외국이론서와 자료들을 참조해서 집필한 프로파간다 연구서다. 소련과 북한의 선전공세에 대응한 우리의 선전전의 실태와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한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대내외 敵性에 대한 심리전 수행의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또 국내 선전전의 실태를 신문, 라디오, 영화, 기타 가두선전, 슬로건 선전 등 선전매체별로 분석하고 매체별 선전전의 특징, 목표, 방법 등을 자세히 제시한다. 그는 선전전을 문화적 기술로서 수행되는 현대전이며, 사상적 무기로서 수행되는 내면의 투쟁으로 간주하고<sup>106)</sup> 대내외 적성의 마음을 어떻게 ‘점령’하여 대한민국의 체제우월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주력한다.

김종문이 제기한 선전전, 즉 전략심리전의 목표와 기조는 한국전쟁기 미국 주도 심리전의 본격적 전개에 앞서 이승만 정권에서 시행되었던 심리전의 성격과 방향을 집약해주고 있다. 마음을 얻는 것(동의, 설득 등)이 아닌 점령을 위한 네거티브 선전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것은 국가 주도의 일원적 통제 하에 신문, 라디오, 영화, 기타(가두선전, 슬로건선전 등) 매체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었다. “신문은 紙彈”, “집필은 執銃”이어야 하고, 라디오는 라디오 보급 확대와 북한을 비롯한 국외의 전파를 방위하는 가운데 계몽선전, 역선전에 주력해야 하며, 영화는 대중성, 국제성, 감각적 재현의 즉각성을 살려 계몽선전의 심리적 소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화는 국외, 특히 아시아반공진영과의 유대를 강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선전 수단

106) 김종문, 『선전전의 이론과 실제』, 정민문화사, 1949.12, 12면.

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하지만 그도 지적하고 있듯이 국가 주도의 선전기구가 정비되어 있지 않고, 또 당시의 경제적 여건으로는 이 같은 선전전을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선 가두선전(대중집회, 가두시위, 포스터 및 빠라)과 슬로건 선전에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대중동원이 선전전의 주류가 된 저간의 사정을 확인할 수 있다.

적대를 기조로 한 네거티브 선전전은 이승만 정부의 통치력으로 볼 때도 불가피했다. 대내외적 냉전의 규정력에 의해 탄생한 이승만 정부였기에 대외적 종속성을 면하기 어려웠고 對사회적 지배력, 위기관리 능력 또한 취약했다.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저항과 38선 무력충돌의 점증으로 남북 적대가 고조되는 현실적 위협 속에서 공세적 방어가 요구되는 상황은 냉전적 경계를 끌어들이 이념적 적대를 조장, 확대시키는 네거티브 선전전의 유용성을 높였다. 앞서 살폈듯이 여순사건을 계기로 법, (행정)제도의 정비와 이의 뒷받침 속에 각종 미디어를 동원한 선전전을 통해 저항의식을 무력화하고 냉전반공의 지배이데올로기를 부식, 침투시키는 것에 주력했다. 그것은 수동적 동의(침묵 등)를 이끌어내는 수준을 넘어 내면화를 강제하는 폭력성으로 시현됨으로써 사회 전반에 내부냉전과 의사합의의 냉전mentality를 구조화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이념적 공명과 문화 권력에의 욕망이 착종된 문화주체들의 재현 작업이 그 과정을 촉진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요컨대 냉전반공을 공동의 자원으로 한 관민협동의 선전전을 통해 생성된 이미지가 반복 재생되어 고정화되고 그것이 체계화를 거쳐 법, 제도, 담론, 일상, 신체, 정신의 영역 전반에 이데올로기로 기능하는 회로가 구축됨으로써 냉전mentality의 부식이 용이했던 것이다.

#### IV. 전후 심리전의 징후-결론을 대신하여

그런데 마음의 점령을 겨냥한 네거티브 선전전이 동의 기반을 확충하는데 迂遠하게 기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이로부터 생성된 의사합의의 냉전mentality는 언제든 균열, 파열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한 것이었다. 따라서 폭력성, 공포를 태생적 기반으로 한 의사합의의 냉전mentality는 폭력을 통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는 본질적 한계를 갖는다. 이에서 비롯된 폭력의 약순환 구조가 분단시대 냉전금기가

다기한 변용과 확장성을 지니면서 한국사회를 장기 지속적으로 규율하는 기본 동력이 되었다. 물론 적극적·능동적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 포지티브한 선전전에 대한 모색이 점차 시도되나 열전은 오히려 적대, 증오, 배제, 공포를 양산하는 네거티브적 선전전을 확대 강화시키게 만든다. 가령, 전시에 ‘세계 공통의 적인 공산주의를 박멸하는 것이 민족적 중대과업’이라는 인식 하에 국민사상의 연구, 지도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립)국민사상지도원의 활동도 포섭, 유인의 적극적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민사상지도원의 첫 번째 과업은 지리산공비토벌의 선무공작이었다.

전략심리전의 성격이 강했던 선전전(Propaganda War)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전개된다. 한국전쟁의 특성과 양상, 즉 국제전적 내전이자 전면전/제한전의 복잡성은 심리전이 활성화되는 배경인 동시에 심리전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소와 남/북, 대내/대외 중층의 다양한 심리전, 예컨대 각종 미디어의 특장을 극대화한 전략심리전, 전술심리전, 선무심리전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운용되면서 한반도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냉전의 거대한 심리 전장이 되었다.<sup>107)</sup> 미군이 시종 주도한 아군의 심리전은 “적을 전단(중이)에 물어라”(육군장관 F. Pace)라는 지침 아래 체계적, 조직적으로 전개되었고, 그 효과 또한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다. 지면 관계상 한국전쟁기 미군 주도로 수행된 심리전에 대해서는 논의를 생략한다. 다만 향후 연구의 전망과 관련해 두 가지 지점을 거론하고자 한다.

첫째, 미국의 심리전 및 미군의 지휘와 지원 속에 수행된 한국군의 심리전 경험은 전후 냉전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심리전체계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시뿐만 아니라 전후, 특히 1954년부터 사상총동원체제 선포를 계기로 사상통제 정책이 강화되는 것과 맞물려 심리전은 대내외적 반공투쟁의 궁극적 성공을 위해 가장 긴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sup>108)</sup> 사상전, 심리전, 선전전, 경제전, (냉전)외교전 등 심리전 관련 담론이 번성하고 다소 무질서한 심리전 전략 및 전술, 시책 등이 축출하는 과정을 거치며 체제우월의 이데올로기적 (역)선전전을 중심으로 한 전략심리전이 점차 체계적으로 전개되기에 이른다. 특히 대북 전파심리전의 효과가 입증된

107) 정용욱, 「6·25전쟁기 미군의 빠라 심리전과 냉전이데올로기」, 『역사와 현실』 51, 한국역사연구회, 2004, 129~131면.

108) 「심리전에 주력하라」(사설), 『동아일보』, 1955.7.29.

가운데 전파전이 심리전의 주축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전쟁기 수행된 심리전의 학습된 경험이 발전적으로 재연되는데, 가령 베트남전쟁에서 남/북한의 상호 적대의 심리전 전개, 1952년 3월 세계적 이슈로 파장을 일으킨 세균전심리전의 경험에 바탕을 둔 1970년 북한의 세균전에 대한 대대적인 선전 공작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둘째, 확대 강화된 형태의 심리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내부적으로는 프로파간다, 감시, 동원이 일상화됨으로써 냉전mentality의 신체화, 내면화가 촉진되었다. 냉전, 열전을 경험하며 누적된 사상 통제의 피해의식으로 형성된 수동적 방어기제에다 전후 전략심리전의 공세가 덧붙여지는 과정은 ‘원죄’를 부각시키며 원한, 공포가 모 세혈관처럼 사회 전 영역을 관통하는 (상호)감시와 통제를 만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푸코적인 판옵티콘(Panopticon)의 한국사회, 상시적인 내부냉전 시스템의 조성은 법, 행정제도의 규제보다도 냉전mentality의 고착화에 더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빨갱이라는 말은 친일잔재”라는 대통령의 3·1절 발언, 김원봉의 서훈을 둘러싼 논란으로 재점화된 상호 적대·증오의 진영 및 이념 대결은 친일(부일)파/빨갱이 프레임에 간혀 있는 한국사회의 적나라한 자화상이다. 그 저변에 작동하는 강고한 냉전mentality의 지양이 없이 대안사회의 모색이 과연 가능할까. 전후(전략)심리전과 냉전mentality의 복잡다단한 관계를 논구하는 지면에서 실마리를 찾아볼 예정이다.

## 참고문헌

-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여순사건과 반공국가의 형성』, 선인, 2009
- 김송 편, 『전시문학독본』, 계몽사, 1951
- 김종문, 『선전전의 이론과 실제』, 정민문화사, 1949
- 김지하 외, 『한국문학필화작품집』, 황토, 1989
- 남북문학예술연구회 편, 『전후 북한 문학예술의 미적 토대와 문화적 재편』, 역락, 2018
-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1-국가보안법변천사(증보판)』, 역사비평사, 2004
- 백철, 『문학적 자서전』, 박영사, 1975
- 오제도, 『국가보안법실무제요』, 서울지방검찰청, 1949
- \_\_\_\_\_, 『사상검사의 수기』, 창신문화사, 1957
- 오제도 외, 『赤禍三朔九人集』, 국제보도연맹사, 1951
- 유진오 외, 『고난의 90일』, 수도문화사, 1951
- 전국문학인대회추진위원회, 『아름, 기억 그리고 치유』(여순사건 제70주기 추모 전국문학인여수대회), 2018
- 전국문화단체총연맹, 『반란과 민족의 각오』, 문진문화사, 1949
- 정규진, 『한국정보조직』, 한울, 2013
- 정일형, 『유엔의 성립과 업적』, 국제연합한국협회, 1952
- 진덕규 외, 『1950년대의 인식』, 한길사, 1981
- 채대식 외,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을유문화사, 1951
- 한국구술사학회 편, 『구술사로 읽는 한국전쟁』, 휴머니스트, 2011
- 홍석률, 『분단의 히스테리』, 창비, 2012
- 강성현, 「전향에서 감시 동원 그리고 학살로-국민보도연맹 조직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14, 역사학연구소, 2004
- 김지형, 「한국전쟁기 부역 이데올로기의 전환:부일과 부공의 교차점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17-1, 전남대 5.18연구소, 2017
- 김태광, 「해방 후 최대 양민참극‘보도연맹’사건」, 『말』, 1988
- 김학재, 「한국전쟁기 대통령 긴급명령과 예외상태의 법제화」, 『사회와 역사』 91, 한국사회사학회, 2011
- 박완서,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 『창작과비평』 17-2, 창작과비평사, 1989
- 박원순, 「전쟁부역자 5만여 명 어떻게 처리되었나」, 『역사비평』 11, 역사비평사, 1990
- 서중석, 「이승만과 여순사건」, 『역사비평』 86, 역사비평사, 2009
- 스티 워드, 「교육과 문화」(특별기고), 『문예』, 문예사, 1949

- 신평길, 「남로당과 여순반란 사건」, 『북한』 273, 북한연구소, 1994
- 신행기, 「6·25와 이야기 경험-전쟁수기들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31, 상허학회, 2011
- 양준석, 「1948년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활동과 5·10총선에 대한 미국정부와 한국인들의 인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40-1,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8
- 염상섭, 「해방의 아침」, 『신천지』, 1951.1
- 옥창준·김민환, 「사상심리전의 텍스트로서 한국전쟁-자유세계로의 확산과 동아시아적 귀환」, 『역사비평』 118, 역사비평사, 2017
- 이동순, 「여순사건의 시적 재현양상」, 『아픔, 기억 그리고 치유』, 2018
- 이봉범, 「단정수립 후 전향의 문화사적 연구」, 『대동문화연구』 64,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8
- \_\_\_\_\_, 「상상의 자주적 통일민족국가:북조선, 1948년 체제」, 『한국문화연구』 47, 동국대 한국문화연구소, 2014
- \_\_\_\_\_, 「냉전과 월남지식인, 냉전문화기획자 오영진」, 『민족문화사연구』 61, 민족문화사학회, 2016
- 이완범, 「미군정과 민족주의, 1945~1948」, 한국현대사연구회 엮음, 『한국현대사와 민족주의』, 집문당, 1996
- 이임하, 「한국전쟁기 부역자 처벌」, 『사림』 36, 수선사학회, 2010
- 이혜령, 「빨치산과 친일파-어떤 역사 형상의 종언과 미래에 대하여」, 『대동문화연구』 10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7
- 임종명, 「여순‘반란’재현을 통한 대한민국의 형상화」, 『역사비평』 64, 역사비평사, 2003
- \_\_\_\_\_, 「여순사건의 재현과 폭력」, 『한국근현대사연구』 32, 한국근현대사학회, 2005
- 장영민, 「정부수립 이후(1948~1950) 미국의 선진정책」, 『한국근현대사연구』 31, 한국근현대사학회, 2004
- \_\_\_\_\_, 「한국전쟁 전반기 미군의 심리전에 관한 고찰」, 『군사』 5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 정용욱, 「6·25전쟁기 미군의 빠라 심리전과 냉전이데올로기」, 『역사와 현실』 51, 한국역사연구회, 2004
- 조연현, 「해방문단5년의 회고 ①~⑤」, 『신천지』, 1949.10~1950.2
- 조은정, 「해방 이후(1945~1950) ‘전향’과 ‘냉전국민’의 형성-전향성명서와 문화인의 전향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8
- 채만식, 「도야지」, 『문장』 속간호, 1948

# Propaganda and Cold War Prohibition

## — Institutionalization of the Rebellion, Conversion, Treachery Agenda and the Interior Cold War

Lee, Bong-beom

This study finds out the origin of major Cold War taboo like rebellion, conversion, treachery and its process of institutionization and the sources it could have lasted for a long time in propaganda. In September 1947, Korean issues transfer to the United Nations and it causes to promote internal and external Cold War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means the Cold War has been clarified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an the phase of single-handed election and separate government, ideological confrontation and compressed eruption of agenda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state are concluded by institutionalization of division. After that, the Cold War confrontation caused by enactment of National Security Law is combined with agendas like rebellion, conversion, treachery, thus, a full time Cold War structure has set in Korean society through the opportune connection and transformation of various ideological meaning. Yo-Soon Revolt became an opportunity to promote and construct the anti-communism and extreme right system. In that process, a fear, hostility, hatred about communism and justification of genocide and distorted recognition about Yo-Soon Revolt has been fuelled by private-public joint propaganda and the reappearance of special image in literature, film, photographs. National guidance federation, an organization for bring round convert and also annihilate left party was implement the operation that destroy the opponents of the regime and commands the power technique of conversion-surveillance-mobilize. Conversion in cultural area is instance of best implemented conversion technique of hunt down, bring round, conversion, mobilize, surveillance. Institutional reinstatement of pro-Japanese cultural artist is realized while constant surveillance-mobilize system and cultural interior Cold War structure become established and ultimately discouraged

anti-imperialist and anti-feudal cultural agenda. While ideological value overwhelmed the nation value because of the Korean War, communism treachery has emerged as single representation. Treachery cultural artists had to go through the procedure of confession and repentance, it caused appearance of various memoirs of experiences. At that time, all experience records used for propaganda material to reinforce the anticommunist front by inspiring fear and hostility, which strongly demonstrates ideological discourse effect. The Korean War caused forming frame of the nation rebellion entangled with Cold War taboo like the left, conversion, treachery, defection to North Korea. It functioning as long-lasting apparatus reproducing the cultural power of the Cold War division system and reigning as discipline apparatus which surpass the state violence. Cold War taboos as above are infiltrated and rotten by propaganda. The image made by the propaganda war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people which aimed at the occupation of the mind and made a Cold War against communism to common resources has been displayed repeatedly and fixed. Through this codification, the course formed and it functioning as ideology in law, system, discourse, daily life, the body, spirit so that pseudo-Consensual Cold War mentality could corroded easily.

**Key Words** : Cold War, propaganda, revolt, conversion, treachery, interior Cold War, National Security Law, [national guidance federation], mobilization, strife, genocide, reappearance, [Yo-Soon trouble of 1948], frame of the rebellion, propaganda war, psychological warfare, Cold War mentality

